



주간통일정세 2009-37(2009.09.07~09.13)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9-37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북, '김정은=후계자' 사실상 공식화 단계(9/13, 연합뉴스)

- 각 가정 유선방송 통해 김정은 실명으로 선전, 참관지 해설원, 방북 인사에 '김정은 대장' 언급
- 북한 당국은 지난 7월께부터 북한 가정에 설치된 유선 라디오 방송인 '제3방송'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 된 셋째 아들 정운(김정은)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의 자질과 능력을 주민들에게 적극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와 관련, 지난 8월 북한을 방문했던 남측의 한 인사는 한 참관지에서 해설원이 "이곳은 김정일 장군님과 김정은 청년대장 동지께서 다녀가신 곳"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직접 들은 것으로 전해짐.
- 제3방송의 김정은 선전 방송과 관련, 한 대북 소식통은 13일 "북한 당국은 그동안 제3방송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를 '김 대장'으로만 호칭하다 2개월여 전부터는 평양의 제3방송에서 김정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해가며 그를 찬양하는 우상화 선전을 하고 있다"며 "평양에서는 이 방송을 통해 김정은의 '혁명 일화'도 전파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 그는 다른 지역 제3방송에서도 이 같은 선전방송을 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임.
- 평양의 제3방송이 주민들에게 선전한 김정은 관련 '혁명 일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인민군 '대덕산 초소' 일화, 휴전선 서부지역에 있는 이 초소는 김일성 부자가 수차례 찾았으며 북한에선 '일당백' 구호가 유래된 곳으로 알려진 곳인데 제3방송은 "이곳 군인들이 물이 없어 고생하고 있을 때 어떤 젊은이가 나타나 쇠파이프를 박고 지하수를 파내는 데 성공했다. 나중에 알고보니 김정은 대장이었다"는 식으로 선전하는 것으로 전해짐.
- 제3방송은 또 김정은에 대한 첫 찬양가로 알려진 '발걸음'이라는 노래 가사 가운데 김정은을 '김 대장'으로만 지칭하던 것을 수정해 '김정은 대장'이라고 실명을 넣어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방송은 주민통제와 사상교육을 강화할 목적으로 각 가정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만 전달됨.
- 또 북한의 대남 관계자들은 최근 방북한 남측 인사들에게 '김정은 후계'에 관해 비교적 스스로 없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지난달 북한에서 만난 관계자는 후계자 김정을 상징하는 노래인 '발걸음'이 '조직적으로 포치(전파)되고 있다'며 이 노래



의 의미에 대한 질문엔 ‘2~3년 후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언급

- 이 노래는 “척척 척척척 발걸음/우리 김대장 발걸음” 식으로 김정운을 가리키는 ‘김 대장’이라는 표현이 매절에 들어가 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월 생일을 염두에 둔 ‘2월의 위업 받들어’ 등의 가사가 포함돼 있어 김정운 찬양가로 해석되고 있음. 8월말 방북했던 우리 민족서로돕기운동의 관계자도 “봉사원에게 ‘발걸음’을 불러줄 것을 요청하자 주저하지 않고 노래를 불렀다”고 전하고 ‘후계를 암시하는 노래냐’는 질문에 다른 북측 관계자는 “맞는데, 개인적인 견해”라고 답했다고 설명

● 김정일 3남 이름, ‘정은’으로 판단(9/11, 연합)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3남 이름이 그동안 알려진 ‘정운’이 아니라 ‘정은’인 것으로 정부 당국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대북 소식통은 11일 “정부 유관 당국은 최근 김 위원장 3남의 정확한 이름이 기존에 알려진 ‘정운’이 아니라 ‘정은’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 통일부와 정보 당국자 등은 이에 대한 공식 확인 요청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밝힘.
-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3남 이름이 원래 ‘정운’이었다가 후계자로 지명되면서 ‘정은’으로 개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 그동안 김 위원장 3남의 이름은 김 위원장의 전속 요리사로 활동했던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藤本建二) 씨의 증언 등을 통해 ‘정운’으로 알려져 왔음. 일본 마이니치(毎日) 신문은 최근 자체 입수한 북한 내부 문건에 ‘김정운’으로 알려진 김 위원장 3남 이름이 ‘김정은’으로 표기돼 있었다고 지난 8일 보도

● 김정운은 군사의 영재, 日紙 北우상화 문건 입수(9/8, 마이니치 신문)

- 북한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3남 정운(正雲)을 우상화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이는 문서를 중국에서 입수했다고 일본 마이니치(毎日)신문이 8일 보도, 마이니치는 이 문서에 ‘정운’이라는 이름이 ‘정은’으로 표기돼 있어 앞으로 ‘正銀’ 또는 ‘正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
- 신문이 입수했다고 보도한 문서는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 동지의 위대성 교양자료’ 등 세 종류임. 이 자료에는 ‘김정은 대장은 군사적 안목이 넓고 실력이 비할 데 없이 높다’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는 우리의 군대와 인민을 지도해온 유일무이한 분의 후계자’ ‘천재적 영지(英知)와 지략을 지닌 군사의 영재’ 등의 표현이 들어 있음. 마이니치는 이 문서가 인민무력성 또는 국가안전보위부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문서에 노동절(5월 1일) 불꽃놀이 행사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그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마이니치는 또 다른 문건에 ‘하루라도 빨리 김정은 대장 동지를 경애하는 장군님의 후계자로 추대하여 장군님의 노고를 가볍게 해준다면 좋을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보도. 마이니치는 ‘정은’이라는 이름과 관련, 김정일 위원장의 한자 이름도 1980년 10월 그 당시까지 알려진 ‘金正一’이 아닌 ‘金正日’로 확인된 바 있다고 보도

나. 정치 관련

● 北매체, ‘김정일 공격정신’ 따르라 주문(9/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이 12일 ‘과감한 공격정신과 대고조’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격하고 또 공격해 나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공격정신’을 따를 것을 주민들에게 강조
- 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7월 “어느 한 단위의 일꾼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는 한 평생 강한 의지력을 지니고 공격정신으로 일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주도한 것이나 ‘150일전투’를 시작한 것도 “그런 공격정신의 발현”이라고 말했다고 소개
- 신문은 “공격정신은 말 그대로 공격전의 정신”이라며 “150일전투의 양양된 기세를 계속 견지하면서 총공격전으로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야 한다”면서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결정적 전환의 해, 변이 나는 해로 빛내이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최후 승리를 향하여 공격하고 또 공격”할 것을 주문

● 北, ‘150일전투’ 이어 ‘100일전투’ 계속(9/11, 조선신보)

- 북한은 ‘150일전투’가 끝나는 대로 연말까지 ‘100일 전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조선신보가 11일 보도, 조선신보는 ‘만풍년’이라는 제목의 ‘메아리’란에서 “(북한에선) 150일 전투가 만풍년을 자랑하듯 여러 단위들에서 연일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그 기세를 조금도 늦춤이 없이 100일 전투에 이어 나간다고 한다”고 밝힘.
- 신문은 “총련(조총련) 중앙위원회 21기 3차회의 결정에 따라 총련에서도 100일 운동이 시작되니 조국인민들과 총련은 올해 막바지까지 힘찬 투쟁을 함께 벌리는 셈”이라고 언급
- 북한은 고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을 맞는 2012년을 ‘강성대국’ 달성의 목표 시한으로 잡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말 천리마 제강연합기업소를 방문해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킬 것을 주문한 데 따라 지난 4월 20일부터 ‘150일전투’에 들어가 9월 17일 종료할 예정



● 北, 정권수립 61돌 차분한 분위기(9/9, 연합)

- 북한은 정권수립 61돌(9.9)을 맞아 예년 수준의 기념행사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150일전투'와 연계해 주민들의 노력동원을 극대화 하는데 주력, 기념행사로는 고(故)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도 업적'을 선전하기 위한 공연과 전시회가 개최중임.
- 북한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일성화(花)·김정일화 전시회'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묘향산(1~3일)과 칠보산(5~7일)에서 각각 열렸음. 7일에는 조선직업총동맹 중앙노동자예술선전대의 공연이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청년들의 경축음악회가 청년중앙회관에서 각각 개최, 북한이 '대집단체조 및 예술공연'이라고 자랑하는 '아리랑'은 지난 8월 10일 평양 룡라도 5월1일경기장에서 개막공연을 한 데 이어 현재 공연이 한창 진행중임.
- 8일 저녁에는 당·정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보고대회가 개최, 이와 함께 북·중 '친선의 해'를 맞이해 중국 작가들이 창작한 미술작품 90여 점이 출품된 중국미술작품전시회가 7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개막됐으며, 지난 1일 방북한 러시아의 '21세기 관현악단'은 지난 4일 평양대극장에서 첫 공연을 진행, 중국과 러시아, 조총련의 각급 대표단들은 '9.9절' 행사에 때맞춰 평양을 방문

● 노동신문, 목표달성 강조(9/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이 '150일 전투' 종료를 10일 앞둔 7일 장문의 논설을 싣고 "혁명적 기세는 계속 견지돼야" 한다고 말해 '150일 전투' 종료 이후에도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목표를 위한 대중동원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
- 신문은 "우리의 대진군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올해는 "이상스러운 정도로 모든 일이 잘 되는 해"라며 "대비약의 돌파구는 이미 열려졌다"거나 "우리의 승리는 과학이며 필연"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낙관을 심으려 노력
- 신문은 그러나 "지금 세계에는 우리의 강성대국 건설 투쟁의 승리와 그 전도에 대하여 의문시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조선이 인차(곧) 주저앉게 될 것이라는 낭설이 얼마나 많이 떠돌았는가"라고 말해 북한 내부에서도 불안감과 회의론이 떠돌고 있음을 방증
- 신문은 한편 "대고조의 열기"가 식지 않도록 하는 당 간부들의 "송풍기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특히 "생산과 건설을 캄빠니아(캠페인) 식으로, 임시변통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 신문은 이와 함께 "단결의 천하지대본은 민심이며, 민심을 틀어쥐는 길은 혁명적 군중노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데 있다"며 '군중노선의 관철'을 강조



- **노동신문, 군사적 강권으로 비핵화 진전 없어(9/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 ‘백해무익한 선택을 하지 말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미국은 우리와의 대결 역사를 총화(결산)해 볼 필요”가 있다며 “거기에서 교훈을 찾고 백해무익한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것을 미국에 거듭 요구
 - 신문은 이날 “미국의 대조선(대북) 군사적 강권정책이 강행되는 속에서는 조미(북미)관계와 조선반도 비핵화에서 그 어떤 변화도 진전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

다. 경제 관련

- **평양에 첫 러시아상품 전문상점 개점(9/11, 조선신보)**
 - 평양에 러시아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상점이 생겼다고 조선신보가 11일 보도, 북한의 금영합작회사가 운영하는 이 상점은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원동지역 권천식 위원장과 러시아 웨네라 유한책임회사의 정혜성 사장 등 러시아의 고려인들이 투자
 - 평양시 중구역 동흥동에 현대적인 건물을 세우고 지난 3월 초 개점한 이 상점은 러시아제 남녀 계절옷과 가방, 신발, 화장품을 비롯한 경공업 제품, 보드카를 비롯한 식료품을 판매, 1층의 상점과 2층의 식당은 언제나 손님들로 붐비며, 3층에는 현재 첨단과학기술자료 봉사실이 건설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
 - 금영합작회사의 박미화(41) 부사장은 “재러시아 동포들과 공동으로 러시아 상품의 전문판매점을 내오기는(조직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
- **평양거리에 염소젖발효유 전문매대 등장(9/1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평양 곳곳에 염소불고기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선 염소젖 발효유를 일컫는 러시아말인 케피르를 비롯해 염소젖가공품(유가공품)들도 판매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소개
 - 케피르는 젖을 젖산균과 알코올 발효균이 들어 있는 케피르씨균으로 발효시켜 만든 유제품으로, 새콤하고 달며 차게 먹는 것으로 알려져. 평양시인민위원회 상업관리국 케피르판매소의 최윤희 지배인은 “판매소 산하 각 구역의 분점들에서 신선한 염소젖가공품을 봉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중앙통신도 “각 구역에 자리 잡은 케피르 분점들은 노인부터 어린이까지 수많은 손님들로 언제나 흥성이고 있다”고 말해 케피르를 염소불고기 식당 외에 거리 전문매대에서도 팔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통신은 “수도의 거리마다에 케피르 매대가 생겨난 것은 여름철의 유다른 풍경”이라고 말해 이번 여름부터 케피르 매대가 생겼음을 시사, 평양시 평천구역 북성1동에 있는 염소불고기 식당은 케피르, 치즈, 고기케피르즙구이, 치즈감자빵가루튀기, 염소고기 완자 등 10여 가



지 음식을 제공

- 조선중앙통신은 또 평양의 대동강식료기공공장이 최근 “질적 특성이 비할 바 없이 개선된” 새 과일탄산단물가루 제품들을 개발했다고 소개, 이 가루는 “탄산가스 포화도가 종전의 3배 이상”이고 “가스가 순간적으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방출”돼 “시원하고 쫄한(짜릿한) 맛을 오랜 시간 유지”하는 게 특징이라고 설명

● 北-EU간 2008년 교역 40% 증가(9/11, 자유아시아방송)

- 2008년 북한과 유럽연합(EU)간 교역액이 약 2억700만 유로를 기록, 2007년보다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EU의 대북 무역통계를 인용해 11일 보도
- 그러나 2007년 북한과 EU간 교역액은 2006년에 비해 53%나 감소한 기록이어서 2008년 급증은 2006년 수준으로 회복한 것을 의미, 2007년 교역액의 급감은 북한이 2006년 10월 핵실험을 한 데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에 EU가 본격 동참한 결과, 이에 따라 북한의 지난 5월 제2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1874호를 EU가 엄격히 이행할 경우 앞으로 북한과 EU간 교역이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오티사는, 北-유럽 운송 거의 도맡아(9/10, 연합)

- 아랍에미리트에서 압류된 북한 컨테이너의 운송을 담당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이탈리아 업체 오티(OTIM)사는 북한과 유럽 간 물자운송의 대부분을 담당
- 1950년대 후반 설립된 오티사의 주 업무는 해상 및 육상, 항공 운송. 이밖에 전시행사 대행과 관광업도 수행, 연 매출 4천만 유로(약 700억 원) 정도의 가족기업이지만, 북한에 사무실을 가진 유일한 이탈리아 기업으로서 특히 유럽에서 북한을 드나드는 물자의 운송을 거의 독점
- 마리오 카르니글리아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북한과 거래를 트게 됐고, 로마 주재 북한대사관의 추천을 받아 본격적으로 거래하게 됐다”고 소개, 그는 “다른 회사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고, 복잡한 절차와 서류 작업을 필요로 하는 국제운송사업의 특성상 기존에 거래해온 우리 회사와 계속 거래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더 편리하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언급
- 오티사는 북한에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 의료장비와 용품, 건축자재 등을 운송해왔고, 피아트 자동차를 부품 형태로 운송해 남포항에서 재조립하는 방식으로 수출하기도 했으며, 북한산 맥주의 병입(보틀링)도 맡아왔음. 특히 이 회사는 북한이 매년 5월과 9월 두 차례 개최하는 평양국제상품전람회(PITF)에 참가하는 외국기업의 전시품 반출입 허가수속과 수송을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을 정



도로 북한당국의 신임을 받고 있음.

- 한편 오팀 사는 이탈리아에서 북한으로 가는 여행비용 비자 발급을 대행하는 업체이기도 함.

● 평양, 도로 새로 포장하고 건물도 새로 단장(9/9, 연합)

- 8월부터 9월 초까지 북한을 방문한 대북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평양이 최근 도로 아스팔트를 새로 깔고 노후한 아파트를 새로 칠하는 등 시내 모습이 산뜻해졌다고 전언
- 의료협력차 9월 초 방북한 관계자는 9일 “작년부터 해 오던 도로 보수작업의 일환으로 아스팔트를 새로 깔았고 건물에 색칠을 하는 등 전체적으로 많이 깨끗해졌다”고 언급, 그는 “평양에는 1970, 80년대 지은 건물이 많아 2000년대 초입까지만 해도 우중충 했지만 최근 단장을 새로 해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 그는 짓다 말아 흉물로 방치돼있던 105층짜리 류경호텔도 전면 유리공사를 거의 끝내고 옆면 유리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소개
- 8월 말 평양을 둘러보고 온 등대복지회 신영순 이사도 “평양 보통강 구역에 있는 보통강종합편의시설 앞 왕복 8차선 도로도 아스팔트를 새로 깔았다”며 “지난 4월 방북했을 때는 사동구역에 있는 미림학원 가는 길도 포장 공사 중이었는데 이번에 보니 왕복 6차선 도로가 포장이 다 돼 새 길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전언, 그는 “30, 40년 된 건물의 낡은 외관에 타일을 새로 붙이고 도장 보수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고 설명
- 8월 초 방북한 월드비전 관계자도 “평양이 전체적으로 깔끔해졌고 ‘장군님’이 마련해 줬다는 교통경찰의 새 파라솔 초소가 눈길을 끌었다”고 말했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관계자도 “2012년까지 평양에 10만호를 새로 짓는다는 현장은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약 2년 만에 방북했는데 평양이 깨끗해졌더라”고 전언
- 이들은 방북기간이 북한이 세계 최대 집단체조라고 자랑하는 아리랑공연 기간이어서인지 호텔, 식당 등에서 외국인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었으며,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곳곳에서 많이 볼 수 있었다고 설명, 한 방북단체 관계자는 “휴대전화 사용이 훨씬 많아졌다”며 “직급별로 배당되고 요금은 자기가 내는데 카메라폰은 소위 ‘뺨’있고 힘있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 그는 “이전에는 총사장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번에 갔을 때는 참사까지 사용했는데 아직 과장급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더라”고 소개

● 北, 10월 신의주서 고려링크 이통 개통(9/9, 연합; 제295호, 오늘의 북한소식)

- 북한 당국은 10월 10일부터 평안북도 신의주에서도 북한과 이집트 오라스콤사간 합작사인 고려링크를 통한 휴대전화의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9일 온라인 소식지 ‘오늘의 북한소식’ 최근호(제295호)에서 보도

- 북한 당국은 그러나 신의주에서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선 지난 7월 1일부터 단속중이며, 이를 위해 “육성 통화 내용은 물론 문자까지 도청할 수 있는” 새로운 기계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고 이 소식지는 소개
- 자유아시아방송(RFA)도 8일 “중국내 복수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현재 평양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휴대전화가 신의주에서도 10월 1일 개통될 예정이라고 보도

● 北도 첨단 나노기술 개발에 관심(2009년 8월호, 천리마)

- 북한 ‘천리마’가 8월호에서 ‘나노기술의 놀라운 세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나노기술은 21세기 정보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며 국제사회의 나노기술 개발 동향을 소개함으로써 나노기술에 대한 북한의 관심을 보여줌.
- 잡지는 이어 “나노구조 물질은 단단하고 강력하며 신뢰성이 있고 안전하기 때문에 이전의 재료에 비하여 사용 수명이 몇배나 길다”며 따라서 “다리, 도로, 도로표식 및 교통통제 체계뿐 아니라 가볍고 오래 쓸 수 있는 재료를 필요로 하는 수송기재나 항공우주 탐색장치 재료로도 안성맞춤”이며 “군사분야에서도 광범히 이용될 전망”이라고 설명
- 조선중앙TV는 9월 4일, 제6차 전국 나노과학기술발표회 및 나노제품 전시회가 평양 인민대학습당에서 열려 나노 절연재료를 비롯해 100여 점의 나노 분말재료와 제품들이 출품됐으며 나노과학기술분야에서 이룩한 120건의 과학기술 성과 및 경험들이 발표됐다고 보도
- 조선중앙방송은 2008년 9월 김책공업종합대학 졸업생들이 “무기질 나노분비막과 나노항균섬유 생산공정을 확립하고 나노복합 자외선 차단재료를 찾아내는 데 기여했다”고 보도

● 北 원산제염소, 연간 1만5천t 생산(8/29, 노동신문)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8월 28일 시찰한 강원도 원산제염소는 500정보(1정보=3천평) 규모 면적에 연간 생산량은 1만5천t이라고 노동신문이 29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제염소 현지지도 당시 “원산제염소는 인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대단히 중요한 기업소”라며 소금 증산을 위한 기계화를 강조

● 태양에너지개발광합작회사, 태양전지제품 생산(9/6, 조선중앙TV)

- 북한의 태양에너지개발광합작회사가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맞춰 “여러가지 효율높은” 태양전지 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고 조선



중앙TV가 6일 보도

- 이 회사 제품에는 3W, 5W, 10W, 20W, 40W 태양전지 제품과 휴대용 태양전지, 탁상등, 태양전지킵등, 태양모자 등이 있음. 방송은 이 회사 관계자와 문답 형식을 통해, 사용방법에 대해선 태양전지판을 베란다나 해가 비치는 곳에 수평면과 30-55도의 경사를 두고 태양과 일치하게 설치한 뒤 전지판에 연결된 코드를 가정에서 쓰는 12볼트용 대용량 충전기나 배터리에 연결, 충전해 사용한다고 설명

● 8월 생산계획 초과 수행(9/5, 조선중앙방송)

- 북한에서 4월 시작된 ‘150일전투’가 막바지 단계인 가운데 8월 생산계획이 119%로 초과 수행됐다고 조선중앙방송이 5일 주장, 방송은 “이 기간 철강재, 전력, 석탄, 철광석, 시멘트, 화학비료, 일반 천 등 인민경제 주요지표들의 생산과 철도화물 수송량이 지난해 같은 때보다 훨씬 늘어났다”고 설명
- 화학공업성은 8월 계획을 128%로 완수했으며, 건설건재공업성은 8월 계획을 1.2배로 끝냈다고 방송은 주장, 금속공업 부문의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는 강철과 압연강재 생산계획을 각각 105%로 수행했으며, 채취공업성은 150일전투 계획을 앞당겨 끝냈다고 방송은 보도

● 옷 설계 전 공정 컴퓨터화(9/3, 조선중앙통신)

-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정보센터가 최근 모든 공정이 “컴퓨터화”된 새로운 피복설계 지원체계를 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 이 체계는 작도, 옷본 작성 및 증감, 자동 및 대화식 본배열, 옷착용모의 기능 등을 갖췄음.
- 자료 입력부터 옷본 설계, 본 배열, 검사와 수정 등 “모든 공정이 컴퓨터화”된 결과 “기술준비 공정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절반으로 줄이고 설계의 정확성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통신은 보도
- 이 자동설계체계는 이미 애국모란피복공장, 애국최종락피복공장을 비롯한 평양의 여러 피복공장에 도입됐으며, 최근 열린 평양시 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통신은 보도

● 무연탄 다량채굴 공법 새로 개발(9/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석탄과학분원 석탄채굴공학연구소가 무연탄 다량채굴 공법을 새로 개발해 여러 탄광에서 이용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
- 이 공법은 탄층의 매장량, 지질학적 조건 등을 정확히 판정한 뒤 채굴층을 넓은 범위로 확대해 채취율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통신은 설명, 2.8직동청년탄광에선 이 공법으로 석탄 구획의 분포 특성을 파악해 “채탄 방출구당 생산성, 교대당 생산능력을 훨씬 높였다”고 통신은 말하고 “서부지구의 여러 탄광들에서는 이 공법을 도입하여 많은 석탄을 생산하고 있다”고 소개



- **FIFA, 北-마다가스카르 친선경기 주선(9/11, 자유아시아방송)**
 - 국제축구연맹(FIFA)이 44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북한 축구 대표팀을 위해 아프리카 대륙 동쪽의 섬나라인 마다가스카르와 북한간 친선경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
 - 북한은 본선 진출이 확정된 이후 한국 등 다른 진출국들과 달리 지금까지 한차례도 국가대표팀간 평가전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선경기가 성사되면 북한팀엔 본선 준비를 위한 첫 국가대표팀간 평가전이 될 뿐 아니라 월드컵이 열리는 아프리카의 기후와 토양에 대한 적응훈련 기회
 - 마다가스카르 축구연맹의 사린드라 대변인은 RFA에 보낸 이메일에서 “FIFA의 승인을 받은 기관이 오는 11월 북한 축구 대표팀을 마다가스카르로 불러 친선경기를 하겠느냐는 제안을 했다”면서 성사되면 경기 날짜는 11월 14일이나 18일, 장소는 마다가스카르 수도인 안타나나리보의 마하마시나 시립경기장이 될 것이라고 언급

- **교육프로그램 전시회 개최(9/8, 조선중앙통신)**
 - 전국교육부문 프로그램전시회가 2일부터 8일까지 3대혁명전시관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소개, 전시회에는 모의실험실습, 원격교육, 전자도서관 관리운영 프로그램을 비롯해 교육정보와 관련된 750여 건의 프로그램이 전시

- **김정일, 마약으로 뇌졸중 치료, 북에 소문(9/8, 동아일보)**
 - 북한에서 마약인 메스암페타민(히로뽕)이 뇌중풍(뇌졸중)特效약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가 8일 보도
 - 또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장군표 맥주’를 사용해 뇌중풍 마비 후유증에서 벗어났다는 말이 북한과 중국 국경 일대에 퍼지고 있다”고 소개, 장군표 맥주는 중국에서 히로뽕을 지칭하는 은어
 - 신문에 따르면, 히로뽕 밀매에 관여한 적이 있는 한 북한 주민은 최근 “북한에서는 ‘얼음’이 뇌중풍特效약으로 알려져 있어 노인이 있는 집에서는 비상약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 북한에서는 히로뽕을 ‘얼음’ ‘아이스’ ‘빙두’ 등의 은어로 지칭, ‘얼음’은 북한에서 g당 북한 돈 6만 원 가량(약 2만 원)에 팔리고 있음. 반면에 ‘얼음’을 사용한 사람들에게선 식욕이 감퇴하지만 활동량은 매우 증가하고 살과 머리카락이 급속히 빠지는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함.

- **바지 입는 북한 여성 늘고 있다(9/7, 은바오닷컴)**
 - 여성의 바지 착용에 대한 북한의 금기가 풀려 최근 바지를 입는 여성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중국의 동포 매체인 은바오닷컴이 7일 보도, 이 매체는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의 9월 4일자 평양발 보



도를 인용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바지를 입는 여성이 늘었다고 보도

- 환구시보는 “북한 노동당 중앙기관지인 노동신문은 편리하고 보기 좋게 입자는 내용으로 여성들도 단정한 바지를 입자고 건의했다”고 보도, 환구시보 평양주재 기자는 “지난 2년 간 평양에서 바지를 입은 여성을 보지 못했다”며 “춘하추동 4계절 내내 평양의 여군을 제외한 일반 여성, 여경 등은 치마를 입었지만 최근 바지를 입는 여성이 늘었다”고 언급, 이어 “이런 변화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하면서 “거리에서는 규찰대가 여성들의 옷차림을 지도하고 있다”고 소개, 또한 “여성들은 바지가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색상이 단조로우며 스타일도 다소 촌스러웠다”고 설명
- 신문은 이어 평양의 한 외국인 회관에서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이 치마와 바지의 장단점에 대해 “치마는 전통적인 여성의 복장으로 여성미를 보일 수 있다”며 “바지는 주로 날씨가 추운 겨울에 보온을 위해 입는다”고 말했다고 전언
- 평양에서 의류 사업을 하는 중국인 상인은 “이전에는 여성들이 바지를 입지 못하게 해 수요가 없었지만, 최근에는 달라져 바지를 찾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 북한에서 좋은 품질과 멋진 패션을 내세운 의류업이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
- 한편, 2008년 12월 12일 자 텐진일보(天津日報)는 “북한에는 여성들이 치마만 입어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며 “김일성 생전에 바지는 남자들이 입는 것이라고 강조해 여성들은 바지를 입지 못했다”고 보도

● 北서해갑문 수역 철새 56종 관찰(2009년 4호, 과학원통보)

- 과학원통보는 2009년 제4호에서 ‘우리나라 서해갑문 수역에서 주요 물새류의 가을철 이행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주요 물새들이 서해갑문 수역에 겨울나기(겨울나기)하러 오는 시기는 9월 초이며 12월 상순까지 이행이 계속된다”고 밝히고, 그 가운데서도 10월 말~11월 초에 가장 많으며, 조사 기간에 관찰된 물새의 종류는 오리류 21종, 도요류 18종, 갈매기류 8종, 기러기류와 농병아리류, 가마우지류가 각 3종 등 총 56종이라고 설명
- 조사는 2007년 9~12월 서해갑문 수역에서 물새들이 많이 모이는 2개의 수역(강하류, 바닷가)에 각각 길이 4km, 너비 0.5km의 고정관찰 수역을 설정하고 밀물 2시간 전후를 기본으로 해 월별로 2회 진행, 논문은 “조류독감(AI)을 미리 막기 위한 조류이행도 작성의 첫 공정으로서 주요 물새류의 가을철 이행을 연구하였다”고 조사 배경을 밝힘.



2. 대외정세

가. 유엔 안보리관련

● 美, 국제사회에 對北제재 강화 촉구(9/9, 연합)

- 미국은 8일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유엔의 강력한 제재가 필수적이라며 모든 국가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촉구
-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미국 대사인 글린 데이비스는 이날 IAEA 이사회 연설에서 “유엔이 결의한 제재 조치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일이 필수적”이라며 “제재 조치의 이행은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와 국제 외교 사회로의 복귀가 유일한 선택 방안임을 확신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주장
- 데이비스 대사는 “모든 국가들이 유엔의 제재 결의에 걸맞은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북한을 상대하는 데는 투명하고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필수적이며 핵 확산 방지 조약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지적, 그는 또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목표를 지지한다”면서 “북한은 완벽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언급
- 유럽연합(EU) 역시 성명에서 북한의 우라늄·플루토늄 무기화 활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에 “즉각적이고 명백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해체할 것을 요구, EU는 또 북한이 지난 4월 영변 핵시설에 배치됐던 모든 IAEA 감시 장비를 철수시키고 시찰자들에 출국 명령을 내린 뒤 불능화됐던 핵시설을 복구하기로 한 결정을 폐지하고 IAEA와의 협조를 재개·유지해야 한다고 주장
- 한국, 러시아, 일본 등 6자회담 참여국들도 이와 비슷한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이날 회의에 참석한 IAEA의 35개 이사국은 모두 북한이 6자회담과 IAEA와의 공조를 재개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음.

● 美, 北 2개 기관 추가 자산동결 (9/9, 연합)

- 미국은 8일 북한이 핵프로그램 활동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2개 북한기관에 대해 추가로 미국 내 자산동결 조치를 취했다고 밝힘.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는 혐의로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원자력총국과 조선단군무역회사를 추가로 자산동결 대상 기업으로 지정



나. 북·미 관계

● 클린턴, 北에 보즈워스 방북 수용 제안(9/12, 미국의소리방송)

- 8월 4일 방북한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받아들일 것을 권유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2일 보도
- 당시 방북에 동행한 존 포데스타 미국진보센터 회장은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 현지 시간)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당시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 측에 보즈워스 특사의 방북을 받아들일 것을 권고했다”고 언급
- 포데스타 회장은 VOA와 인터뷰에서 또 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해, 그가 여러 시간 클린턴 전 대통령과 대화에 임할 정도로 기력이 있어 보였고 “아주 직설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얼굴과 팔에 여전히 뇌졸중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언급

● 美, 北과 양자대화, 2주내 결정(9/12, 연합)

- 미국 국무부는 11일 미국은 북한과 양자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으며 시간과 장소는 앞으로 2주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힘.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 양자 논의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
- 크롤리 차관보는 “우리는 양자대화의 방식과 장소를 앞으로 2주일 내에 결정하려고 한다”면서 “언제 어디서 대화가 진행될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 그는 “우리는 6자회담을 진전시킬 수 있다면 양자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것 외에는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다”고 소개
- 이어 크롤리 차관보는 9월 21~25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가 북한과 양자대화를 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 그는 “유엔총회가 고위급 지도자들이 6자회담 참가국들과 대화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다른 지도자들이 6자회담 모든 참가국과 대화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
- 클린턴 국무장관이 박의춘 북한 외무상을 유엔총회에서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크롤리 차관보는 “클린턴 장관의 일정에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암시하는 게 아무 것도 없다”라고 대답

● 美국무부, 무엇을 하든 관련국과 긴밀협의(9/6, 미국무부)

- 미국 국무부는 9일 6자회담 재개 이전 북미 양자대화 개최에 대한 5자(한·미·일·중·러)간 양해가 이뤄졌다는 보도와 관련, 미국은 어떤 일이든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힘.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6자회담 이전이라도 6자회담을



다. 북·중 관계

● 北, 中 국경절에 김영남 파견(9/12, 아사히 신문)

- 중국의 건국 60주년 기념일인 국경절(10월 1일)에 맞춰 북한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특사로 베이징(北京)에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2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북한의 고위 관리가 이달 한국의 비정부단체(NGO) 관계자에게 이런 내용을 밝혔다고 설명, 이 고위 관리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이름을 제시하면서, 김영남 위원장의 중국 방문 기간에 중국의 중개로 북미 대화를 희망하고 있음을 내비침.
- 북한의 이 관리는 10월 이후 (북한이)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4개국에 대해 동시에 대화에 나설 것을 요청할 생각이라는 뜻도 표명했다고 아사히는 보도, 아사히에 따르면 이 관리는 또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도 기대하면서 “(북한과) 일본 사이에 비공식 접촉이 시작됐다”고도 언급했다고 보도

● 원자바오, 10월 방북 추진(9/12, 마이니치 신문)

- 중국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10월 초순에 북한에서 열리는 ‘조(북한)·중 친선의 해’ 행사 폐막식 참석차 평양을 방문기로 하고 북한 측과 조정 중이라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12일 보도
- 마이니치는 베이징에 있는 북수의 외교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 같이 전하고,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에 앞서 중국 측은 조만간 고위 관리를 북한에 보내 막판 절충을 벌일 것”이라고 관측
-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면, 취임 이후 첫 방북이 됨. 외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은 중국 건국기념일(10월 1일) 이후부터 한·중·일 정상회담(10월 10일 예정)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 방북 시에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회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은 보도

● 中지도부, 북·중 협조 강화로 지역평화 수호(9/9, 연합)

- 중국 지도부가 9일 북한의 정권 수립 61주년을 맞아 북측 지도부에게 축전을 보내 “중·조 선린우호협조관계의 발전을 추동함으로써 두 나라 인민에게 보다 복리를 가져다주고 본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우방귀(吳邦國)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는 이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일 내각 총리에게 보낸 축하전문에서 이같이 언급
- 축전은 또 “우리들은 조선측과 함께 계속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조강화의 정신에 따라 중·조 외교관계 설정 60돌을 계기로



두 나라 사이의 각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 이어 “중국 당과 정부와 인민은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일관하게 귀중히 여기고 있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융성변영과 인민의 행복을 축원한다”고 덧붙였다.

● **中, 北 6자회담 복귀 우회 촉구(9/8, 연합)**

- 중국은 핵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북한에 대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무기화 주장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요구받고 “우리는 유관 당사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정상궤도로 돌아오길 희망한다”고 언급
- 장 대변인은 “중국은 각 당사국이 대국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길 희망한다”고 강조

라. 북·러 관계

● **北우라늄농축 정보 입수된바 없어(9/11, 연합)**

- 북한의 우라늄 농축 성공 주장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10일 현재까지 북한의 우라늄 농축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입수된 것이 없다고 밝힘.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의 발표 내용에 대해 예의주시해 왔다”면서 “북한이 실제 우라늄 농축을 했는지, 이를 무기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언급, 그는 “북한의 발표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까운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거듭 강조
- 네스테렌코 대변인은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거스르고 있고 한반도와 그 주변 안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북한의 안보 우려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이 문제가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현재 러시아는 6자회담이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형태로 간주하고 다른 관련국들과 함께 회담 재개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

● **러 외무장관, 북한은 6자회담 복귀 촉구(9/9, 연합)**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8일 “북한이 고립을 피하려면 즉각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재삼 촉구
- 라브로프 장관은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 대화를 하는 것만이 한반도 핵 문제에서 상호 수용할만한 해결책을



만들 것"이라면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 모두가 협상 재개를 원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도 명시된 내용이다"고 강조,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고립과 위협 정책은 그들의 설 자리를 잃게 할 뿐"이라고 경고

마. 북·일 관계

● 北, 납치문제 새출발 해야(9/11, 교도통신)

-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대사는 11일 평양에서 교도통신과 회견을 갖고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 등을 담은 지난해 8월 중국 선양에서의 북일 실무자협의 합의 내용에 대해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힘.
- 통신은 그의 이런 발언은 일본의 차기 정권을 상대로 이들 문제를 의제로 하는 대화를 재개할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특히 송 대사는 납치문제에 대해 "사실상 모두 해결된 문제"라면서 "(북일) 쌍방이 해결했다, 안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해결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우선 납치 해결의 기준을 논의, 조정해야 한다고 밝힘.
- 송 대사는 "일본 민주당이 총선 과정에서 아시아 외교를 중시하는 주장을 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며 "만약 새 정권 발족 이후 (일본 측으로부터) 접촉이 온다면 실무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 그는 또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2002년 북일 평양선언이 유효하다고 밝히고 "(일본에 의한 한반도 식민지 지배라는) 과거를 청산하는 용단 아래, 관계개선을 하려 한다면 우리도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 그러나 송 대사는 북한이 결코 북핵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반도 핵 문제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 근저에 있다"며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재차 요구

● 日 하토야마, 북일관계 개선 北대응에 달려(9/10, 교도통신)

- 일본의 차기 총리로 취임하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는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새 정권 출범을 계기로 북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표시한 것과 관련, "전적으로 북한의 대응에 달려있다"고 밝혔다고 교도(共同)통신이 10일 보도
- 통신은 하토야마 대표의 이런 발언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 등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
- 하토야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미사일을 여러 번 발사했고 핵개발과 핵실험을 했으며,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도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관계개선이 되지 않는 것



- 은) 북한측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
- 국민신당의 지미 쇼자부로(自見庄三郎) 간사장도 “신정권을 환영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평가하면서도 “납치, 핵 문제 등의 해결은 국제협력을 통해서 북한에 압박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지적
- 후쿠시마 미즈오(福島瑞惠) 시민당 당수는 “새 정권 내에서 철저히 협의를 나가겠다”고만 답변

● 日 교도통신 사장 방북(9/8, 조선중앙통신)

- 이시가와 사토시 사장을 단장으로 한 일본 교도통신사 대표단이 8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통신은 그러나 교도통신의 방북 목적과 일정은 소개하지 않음.

3. 대남정세

● 당국, 北 황강댐 방류직전 만수위 확인(9/13, 연합)

-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황강댐을 무단 방류하기 직전까지 댐의 높이에 육박할 정도로 물이 팍 차 있었으며, 최근 7차례에 걸쳐 무단방류한 사실을 확인, 정부 고위 소식통은 13일 “정보 당국이 북한 황강댐의 방류 전후 위성사진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무단 방류 직전까지 댐이 만수위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힘.
- 이 소식통은 “댐이 만수위였던 것으로 미뤄 물을 빼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면서 “방류 이전 내린 비에 의해 황강댐으로 물이 자연적으로 유입됐거나 임진강 상류의 지류에 설치된 수십개의 보와 댐(언제) 가운데 일부가 터져 물이 황강댐으로 급속히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
- 지난 2월 완공된 황강댐은 전체길이 1천100여m 가운데 73%인 810여m가 중앙에는 점토를, 주변에는 자갈과 모래로 다지고 돌을 쌓아 만든 ‘사력(沙礫)댐’인 것으로 당국은 파악, 나머지 구간은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음. 이 때문에 물이 차면 붕괴의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수위가 높아질 때 긴급하게 수문을 열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으나 정보당국의 확인 결과 황강댐에는 균열이나 파손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짐.
- 소식통은 “당국은 분명히 의도적인 방류로 보고 있지만 그것이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됐는지 아니면 단순한 방류 필요에 따라 이뤄졌는지를 분석 중”이라며 “아직까지 ‘수공(水攻)’으로 불만한 징후는 없지만 남측에서 대비하기 어려운 취약 시간대에 대규모의 수량을 방류한 의도에 대해서는 추가 정보를 수집해가며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
-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황강댐을 8월부터 지난 6일까지 일곱 차례



- 논평은 전날 북측의 해명에 대해 “정부는 북측의 이런 통지는 우리 측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우리 측 심각한 인명피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힘.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논평에서 ‘무단 방류’란 표현을 쓴 데 언급, “북측이 어제 관계기관 명의로 스스로 밝혀온 바에 따르면 자기들이 무단방류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봐도 될 것”이라고 설명

● 北, 임진강수위 높아져 긴급방류(9/7, 연합)

- 북한은 7일 북측의 사전 통보없는 임진강 댐 방류로 인해 경기도 연천군에서 우리 측 민간인 6명이 실종된 사태와 관련, 강 상류의 수위 상승 때문에 긴급 방류했다고 공식 해명
-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7일 오후 5시께 ‘관계기관’ 명의로 보내온 대남 통지문에서 “제기된 문제를 알아본 데 의하면 임진강 상류 북측 언제(둑)의 수위가 높아져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에 긴급히 방류하게 됐다”고 해명, 북측은 이어 “임진강 하류에서의 피해방지를 위해 앞으로 북측에서 많은 물을 방류하게 되는 경우 남측에 사전 통보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통보
- 북측의 이번 통지문은 7일 오전 정부가 국토해양부 장관 명의로 보낸 대북 통지문에 대한 회신 성격임.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북측의 통지는 우리 측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우리 측의 심각한 인명 피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힘.

● 개성 남북경제협사무소 7일 재가동(9/7, 연합)

- 북측의 지난해 ‘12.1조치’로 폐쇄됐던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사무소(이하 경협사무소)가 7일 9개월여 만에 재가동
-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 3일 남과 북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사무소를 7일부터 정상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양측 사무소에 근무자 명단을 교환했다”며 “이에 따라 오늘 오전 9시 우리측 경협사무소 근무자들이 도라산 출입사무소(CIQ)를 거쳐 개성으로 출경했다”고 밝힘.
- 경협사무소는 2005년 7월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같은 해 10월 개소했으며 대북사업을 하는 남측 기업들의 대북 협의 창구 역할을 해왔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美 핵정상회의 결의초안 회람 시작(9/12)

- 미국은 오는 24일 핵비확산과 핵군축을 주의제로 열리는 유엔 특별 핵정상회의와 관련, 핵확산방지를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 강화와 핵확산금지조약(NPT) 강화를 골자로 한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11일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에 회람시켰음.
- AP 통신이 입수한 미국의 초안은 또 특정국을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핵활동을 이유로 앞서 안보리가 이란과 북한에 내린 제재 결의를 재확인하고 있음.
- 초안은 또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단정한 ‘핵확산금지에 대한 중대한 도전들을’ 개탄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이란과 북한을 겨냥한 것이 분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초안은 이밖에 내년 개최되는 NPT 재검토회의에서 북한의 탈퇴 문제가 논의될 것임을 시사해 오는 핵정상회의에서 사실상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문제가 중심의제로 다뤄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음. 초안은 그러나 이란과 북한에 대한 기존의 제재 결의를 확인하는 외에 새로운 추가 제재는 요청하지 않았음.
- 안보리 현 의장국인 미국은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주재로 오는 24일 유엔총회 기간 열리는 특별핵정상회의의 주의제로 핵확산금지조약과 핵군축을 설정한 바 있음.
- 초안은 이날 안보리 다른 14개국에 배포됐으며 안보리 전문가들은 즉각 협의에 들어갔음. 한 협상 측근 외교관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회람 전에 초안 대부분의 조항에 합의했다면서 그러나 중국이 북한 관련 결의를 포함시키는데 반대했다고 전했음. 초안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핵군축협상을 환영하면서 모든 나라들에 핵실험을 자제할 것과 NPT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음.
- 초안은 또 제네바 군축회의에 대해 핵무기나 다른 폭발장치 제조를 위한 핵물질의 생산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을 가능한 한 조기에 마련할 것을 촉구했음.
- 초안은 서두에서 안보리는 NPT의 기본 목표에 따라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여건 조성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모든 NPT 가입국들에 자신들의 의무를 전적으로 이행하고 내년의 검토회의를 통해 NPT가 강화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촉구했음.



- 초안은 NPT가 ‘조기에 보편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아직 NPT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미가입국들에게 동참을 촉구했음. 초안은 또 NPT에서 탈퇴한 북한을 겨냥한 것이 분명한 언급에서 만약 회원국이 NPT 탈퇴를 통보해올 경우 안보리는 이를 지체 없이 다룰 것 이라면서 이 문제가 내년 재검토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음.
 - 초안은 이밖에 모든 나라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을 강화해 추가의정서를 채택할 것을 촉구했음. IAEA 추가의정서는 IAEA가 의심스런 핵물질이나 장소 등을 언제라도 사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초안은 모든 NPT 불이행 사안은 안보리에 회부돼야 하며 안보리는 이것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北우리늄농축 정보 입수된것 없어” <러’ 외무부>(9/10)
- 북한의 우리늄 농축 성공 주장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10일 현재까지 북한의 우리늄 농축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입수된 것이 없다고 밝힘.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의 발표 내용에 대해 예의주시해 왔다”면서 “북한이 실제 우리늄 농축을 했는지, 이를 무기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함. 그는 “북한의 발표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까운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거듭 강조함.
 - 북한 조선통신은 지난 4일 우리늄 농축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폐연료봉 재처리도 마감 단계이고 추출한 플루토늄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유엔 주재 북한 상임대표의 이름으로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보냈다고 보도함.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 사회는 북한이 이미 오래전부터 폐연료봉 재처리, 플루토늄의 무기화, 우리늄 농축시험을 대외 압박 카드로 거론해 왔다면서 북한의 주장을 반신반의하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채택 이후에도 위협적 태도를 버리지 않는 데 대해 반발하고 있음.
 - 네스테렌코 대변인은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거스르고 있고 한반도와 그 주변 안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함.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북한의 안보 우려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이 문제가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현재 러시아는 6자회담이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형태로 간주하고 다른 관련국들과 함께 회담 재개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美, 국제사회에 對北제재 강화 촉구(9/9)
- 미국은 8일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유엔의 강력한 제재가 필수적이라며 모든 국가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



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촉구함.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미국 대사인 글린 데이비스는 이날 “유엔이 결의한 제재 조치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일이 필수적”이라며 “제재 조치의 이행은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와 국제 외교 사회로의 복귀가 유일한 선택 방안임을 확신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말함.

- 데이비스 대사는 IAEA 회의 연설을 통해 “모든 국가들이 유엔의 제재 결의에 걸맞은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북한을 상대하는 데는 투명하고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필수적이며 핵확산 방지 조약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지적함. 그는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의 목표를 지지한다”면서 “북한은 완벽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함.
- 데이비스 대사가 국제 사회를 상대로 북한 제재를 강화토록 촉구하고 나선 것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한국이 최근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반영한 것이라 관측이 나오고 있음.

● 美, 北 2개기관 추가 자산동결(9/9)

- 미국 국무부는 8일 북한의 핵 프로그램 활동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제재의 일환으로 조선원자력총국과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2개 북한 기관에 대해 추가로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고 상업적 거래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힘.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영변 핵 원자력 연구소를 관리하는 원자력총국과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조선 단군무역회사 등 2곳을 추가로 자산동결 대상 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함.
- 국무부는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른 이번 조치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해당 기관의 미국 영토내 모든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 국민과 해당 기관의 거래는 일절 금지된다”고 밝힘. 이번 조치는 북한이 지난 3일 우라늄 농축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폐연료봉 재처리도 마감 단계이고 추출한 플루토늄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이후 미국이 발표한 첫 제재 조치로 북한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제재의 고삐를 풀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됨.
-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미국 대사인 글린 데이비스는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연설에서 “유엔이 결의한 제재 조치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일이 필수적이며, 제재 조치의 이행은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와 국제 외교 사회로의 복귀가 유일한 선택 방안을 확신하게 만드는 길”이라며 모든 국가가 대북 제재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함. 국무부가 제재 대상으로 발표한 원자력총국과 조선단군무역회사는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에 연루됐



다는 이유로 지난 7월16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에 의해서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던 기관임.

- 원자력총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을 총괄하며 핵 연료 구조물과 재처리 시설뿐 아니라 영변 핵 연구소와 5MWe(25MWt) 플루토늄 원자로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며, 조선단군무역회사는 북한 제2과학원 산하기관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연구와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과 기술 획득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곳임. 국무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이 핵무기 및 핵 운반 능력이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재정적, 상업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함.

● “6자회담前이라도 북·미 양자대화 가능”(9/9)

- 정부의 핵심 당국자는 9일 “앞으로 북·미대화가 어떤 식으로 열릴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6자회담 이전이라도 6자회담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북·미 양자대화가 열리는 데 대해 5자(한·미·일·중·러)간 양해가 이뤄져있다”고 말함. 이 같은 발언은 지금까지 북한이 6자회담의 틀로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북·미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변화된 것이어서 주목됨.
- 이 당국자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관련국들 간에 앞으로 북·미대화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해 상호 의견교환이 있었다”며 “아직 북한을 방문할 것인지, 아니면 언제 방문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지만 수주 안에 어떤 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함.
- 이에 앞서 보즈워스 대표는 8일 일본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친 뒤 워싱턴으로 돌아가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북한이 원하는 미·북 간 양자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며 “앞으로 몇 주안에 나의 북한 방문 여부를 포함한 북핵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힘.
- 그는 이어 “북·미대화가 이뤄지더라도 이는 6자회담의 틀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5자간 상호이해가 솔리드(solid)하게 형성돼있다”며 “그런 양해 아래에서 북·미대화가 이뤄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함. 정부 당국자는 그러나 “현재로서는 5자 중 누구도 서둘러서 북한과 대화하려는 분위기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함.

● 러 '6자 차석대표 “협상 중지 없다”(9/8)

- 북핵 6자회담 러시아측 차석대표인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외교부 본부대사는 8일 북핵 협상과 관련, “기자들이 왜 북핵 협상이 중지돼 있느냐고 묻는데, 협상에 중지는 없다(there is no pause)”고 말함. 로그비노프 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도림동 외교부 청사에서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함.

- 그는 “협상이라는 것이 반드시 6자가 한 테이블에 모여 매일 매일 회의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거의 양자 또는 다자적으로 매일 소통(communicating)하고 있다”고 강조함. 이에 대해 위 본부장은 “6자회담은 무대 위(on stage)에 보이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무대 밖(off stage) 대화와 토론도 계속해야 한다”고 말함.
- 앞서 로그비노프 대사는 오전 우리측 차석대표인 황준국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회동한데 이어 오후 허 철 평화외교기획단장과도 면담을 갖고 북핵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그는 이날 오전 황 단장과 회동한 뒤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한국 측과 북핵 현안 전반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했고 6자회담 재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협상 재개가 희망적(hopeful)”이라고 말함.
- 로그비노프 대사는 9일 중국으로 건너가 며칠간 머물며 우다웨이(武大偉) 부부장을 비롯한 중국 외교부 관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말함. 현재 일본을 방문중인 우다웨이 본부장은 11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짐.

● 러 외무 “북한은 6자회담 복귀해야”(9/8)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8일 “북한이 고립을 피하려면 즉각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재삼 촉구함.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 대화를 하는 것만이 한반도 핵 문제에서 상호 수용할만한 해결책을 만들 것”이라면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 모두가 협상 재개를 원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도 명시된 내용이다”고 강조함.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고립과 위협 정책은 그들의 설 자리를 잃게 할 뿐”이라고 경고함.

● 보즈워스 “6자회담틀내 북미양자대화 가능”(9/8)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미국은 북한과 양자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지만 이는 6자회담이라는 큰 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
- 보즈워스 대표는 “미국은 북한과 기꺼이 양자 대화할 수 있다”며 “다만 미국은 양자 간 대화를 다자 간 대화의 대체물이라고는 어떤 식으로든 생각하진 않는다”고 8일 일본 도쿄에서 말함. 이는 북한과 직접 대화 가능성을 열어 두되 6자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됨.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미국 측이 북한과의 대화에서 단기계획은 없다고 말했다고 7일 전함. 사이키 국장은 최근 북한의 외교적 노력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폄함.



국 워싱턴 현지 시간)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당시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 측에 보즈워스 특사의 방북을 받아들일 것을 권고했었다”고 말했다.

-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전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 제안을 북한이 거부한 이후에도 미국의 보즈워스 방북 제안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였음을 말해줌. 이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달초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을 요청한 것은 미국의 제안을 수용한 셈이고, 그에 대해 미국이 즉각 응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미온적인 자세를 나타낸 것은 한국, 일본 등 다른 6자회담 당사국들과 협의 절차를 거치는 등 명분을 쌓을 필요성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임.
- 포데스타 회장은 VOA와 인터뷰에서 또 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해, 그가 여러 시간 클린턴 전 대통령과 대화에 임할 정도로 기력이 있어 보였고 “아주 직설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얼굴과 팔에 여전히 뇌졸중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의 얼굴에 남은 뇌졸중 후유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음.

● 美 “北과 양자대화..2주내 결정”(9/12)

- 미국 국무부는 11일 미국은 북한과 양자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으며 시간과 장소는 앞으로 2주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 양자 논의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크롤리 차관보는 “우리는 양자대화의 방식과 장소를 앞으로 2주일 내에 결정하려고 한다”면서 “언제 어디서 대화가 진행될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우리는 6자회담을 진전시킬 수 있다면 양자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것 외에는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크롤리 차관보는 오는 21-25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가 북한과 양자대화를 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음.
- 그는 “유엔총회가 고위급 지도자들이 6자회담 참가국들과 대화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다른 지도자들이 6자회담 모든 참가국과 대화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 클린턴 국무장관이 박의춘 북한 외무상을 유엔총회에서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크롤리 차관보는 “클린턴 장관의 일정에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암시하는 게 아무 것도 없다”라고 대답했음. 크롤리 차관보는 또 “양자논의의 성격을 적절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는 6자의 틀 안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北 후계논의 수면 아래로” <WP>(9/11)



김정일과 3남 김정운

(서울=연합뉴스) 북한의 조선중앙TV가 25일 방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일대기를 그린 기록영화 ‘누리에 빛나는 선군태양’의 제1부 ‘조선을 빛내이리’에 소개된 김 위원장의 12살 (왼쪽)과 10대 후반의 사진(가운데).

오른쪽은 일본 마이니치(毎日)신문이 입수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급부상한 정운(26)씨의 16세 때 사진. 이 사진은 정운씨가 ‘박운’이라는 가명으로 스위스 베른의 공립중학교 7학년 재학 당시인 1999년 6월 급우들과 함께 찍은 단체사진 가운데 정운씨 모습을 확대한 것이다.

* 이 사진은 <<한국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잡지 사용 불가>>입니다.
2009. 8.27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호전됨에 따라 그의 삼남 정운을 중심으로 한 후계자 문제가 북한 내부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이 11일 대북 인권단체와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음.
- 앞서 10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북한 후계문제와 관련, “그 문제는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면서 김정일 위원장이 노동당과 정부, 군을 “열성적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음.
- WP는 국내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과 열린북한통신, 데일리NK 등 대북 소식지들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지난 7월 후계 문제를 일절 언급하지 말도록 지침을 내렸으며 이후 김정운에 대한 선전활동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 대북 소식지 ‘림진강’의 이시마루 지로(石丸次郎) 대표는 “(7월 지침) 전에는 대단히 시끄러웠고, 후계자 공식 지명이 곧 이뤄질 것처럼 보였다”면서 “지금은 후계 문제와 관련해 고위 관리들의 공식 활동이 전혀 없다”고 말했음.

● “美, 우라늄기술 차단위해 조만간 北과 양자대화”(9/11)

- 북한이 수년내 우라늄 농축기술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이 명백한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미국과 북한간 양자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하며, 실제로 “미 정부도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 올해초 출범한 오바마 정부는 미 조야의 이런 요구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북한의 후계구도를 종합적으로 반영, ‘2010 국방정책검토보고서’ 준비과정에서 북한 정권붕괴 시나리오를 검토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이 최근 베이징을 방문, 중국 정부의 고위당국자들과 만나 북한 정권붕괴를 가정한 급변사태 문제를 논의하자고 중국측에 의사를 타진했다는 얘기가 중국 외교가에서 흘러나온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임.
- 이번 검토작업은 보수정권이던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 당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축출방식의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북한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던 것과 비교할 때 북한 내부로부터의 붕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남. 이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강고했던 김정일 위원장 체제가 약화되면서 김 위원장 유고시 북한내 권력공백 및 통제력 상실 등 북한 정권의 취약성이 커졌음을 방증하는 대목임.

● “미국방정책검토보고서, 北붕괴 변수 검토”(9/9)

- 미국 국방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내년초 의회에 제출할 ‘4개년 국방정책검토 보고서(QDR)’ 준비과정에서 북한 정권붕괴(regime collapse) 변수 등 11가지 시나리오를 검토중인 것으로 8일 알려짐.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010 국방정책검토보고서’의 바람직한 방향을 짚어본 연구논문에 따르면 국방부는 5개 이슈팀을 구성, 북한 정권붕괴 가능성 등의 변수를 검토하면서 QDR의 뼈대를 만들고 있음. 미셸 플러노이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의 지휘 아래 이뤄지고 있는 QDR 준비작업은 미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거나 미래에 맞닥뜨리게 될 위협을 파악해 맞춤형 국방전략을 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논문에 따르면 제1 이슈팀은 북한의 정권붕괴, 파키스탄내 핵무기에 대한 통제상실,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작전수행 등을 분석중임. 북한의 정권붕괴가 제1 이슈팀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은 미국방부의 중·장기 국방·안보전략에서 북한 변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임.
- 또 제2 이슈팀은 중국과 대만, 러시아와 발트해 연안국간의 갈등 문제와 더불어 핵무장을 하게 될 이란을 시나리오로 다루고 있음. 제3 이슈팀은 미국 본토방위, 민간지원, 사이버공격, 재난관리 문제를, 제4 이슈팀은 전 세계적인 미국의 군사배치 조정 문제를, 제5 이슈팀은 국방부 내부 업무 효율성 제고 문제를 각각 검토하고 있음.
- 국방부는 또 이들 5개 이슈팀이 마련할 정책에 미비점이 있을 것에 대비, 민간인들을 참여시킨 ‘레드 팀’을 구성해 정책대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완성도 높은 국방정책검토보고서 성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1997년부터 도입된 QDR은 미국의 국방전략, 군구조, 군현대화 계획, 국방예산 등을 4년단위로 재검토, 국방부가 현재와 미래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틀을 제공하는 보고서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검토되고 있는 이번 QDR은 재래식 전쟁에다 사이버테러,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테러 등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보전략 구축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다. 중·북 관계

● “中, 2003년 피격 탈북자 56명 시신 발견”(9/13)

- 중국 경찰당국이 지난 2003년 10월 압록강에서 총격을 당한 56명의 탈북자 시신이 떠내려가는 것을 발견, 이들 시신을 수습한 사실이 있었다는 중국 공안당국의 문건이 공개돼 주목을 끌고 있음. 탈북자들이 중국 쪽으로 넘어가려다가 집단 사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문건이 공개되기는 처음있는 일로,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탈북자 인권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 연합뉴스가 12일 미국의 북한경제 관련 웹사이트 ‘노스코리아 이코노미 위치’에서 확인한 중국 지린성(吉林)성 공안당국의 공문에 따르면 중국 경찰은 2003년 10월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북·중 접경지역 압록강에서 어린이 7명을 포함해 탈북자 시신 56구를 발견했음.
- 같은 해 10월 7일자로 된 이 공문은 지린성 바이산(白山)시 창바이(長白) 조선족 자치구 공안국에 의해 작성됐으며, 10월 3일 오전 53구의 시신이 발견된데 이어 이튿날인 10월 4일 새벽 3구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적고 있음.
- 공문에는 “검시 결과, 사망자들은 모두 북한 주민들이었고 56명 전원이 총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중국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어가려고 시도하던 과정에서 북한 국경수비대의 총격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기록돼 있음.
- 사망자는 남자 36명, 여자 2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는 소년 5명과 소녀 2명이 포함돼 있음.
- 수습된 시신은 10월 6일 바이산시 지역에서 화장처리 됐으며, 시 관계자들은 유골과 유류품을 어떻게 처분할지에 관해 ‘윗선의 지시’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공문은 서술하고 있음.
- 이 같은 사실을 전한 ‘노스코리아 이코노미 위치’는 구글어스 위성사진을 이용해 김정일 위원장의 호화 저택 등 북한의 비공개 시설을 추적해온 미 경제학자 커티스 멜빈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임.

● “北, 中 국경절에 김영남 파견”<아사히>(9/12)

- 중국의 건국 60주년 기념일인 국경절(10월 1일)에 맞춰 북한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특사로 베이징(北京)에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2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의 고위 관리가 이달 한국의 비정부단체(NGO) 관계자에게 이런 내용을 밝혔다. 이 고위 관리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이름을 제시하면서, 김영남 위원장의 중국 방문 기간에 중국의 중개로 북미 대화를 희망하고 있음을 내비쳤음.

- 북한의 이 관리는 10월 이후 (북한이)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4개국에 대해 동시에 대화에 나설 것을 요청할 생각이라는 뜻도 표명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 아사히에 따르면 이 관리는 또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도 기대하면서 “(북한과) 일본 사이에 비공식 접촉이 시작됐다”고도 말했다.

● “원자바오, 내달 방북 추진” <마이니치> (9/12)

- 중국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내달 초순에 북한에서 열리는 ‘조(북한)·중 친선의 해’ 행사 폐막식 참석차 평양을 방문기로 하고 북한 측과 조정 중이라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12일 보도했음.
- 마이니치는 베이징에 있는 북수의 외교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 같이 전하고,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에 앞서 중국 측은 조만간 고위 관리를 북한에 보내 막판 절충을 벌일 것”이라고 관측했음.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면, 취임 이후 첫 방북이 됨.
- 외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은 중국 건국기념일(10월 1일) 이후부터 한·중·일 정상회담(10월 10일 예정)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됨.
- 중국과 북한은 수교 60주년이 되는 올해를 ‘조·중 친선의 해’로 정했음. 지난 3월에는 김영일 북한 외무성 부상이 방중,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등과 회담했음.
- 중국 측이 원자바오 방북과 핵 문제를 분리하려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고려, 북중 관계의 악화도 막고 국제사회의 비판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라. 일·북 관계

● 北 “납치문제 새출발 해야” (9/11)

-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대사는 11일 평양에서 교도통신과 회견을 갖고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 등을 담은 지난해 8월 중국 선양에서의 북일 실무자협의 합의 내용에 대해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음.
- 통신은 그의 이런 발언은 일본의 차기 정권을 상대로 이들 문제를 의제로 하는 대화를 재개할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송 대사는 납치문제에 대해 “사실상 모두 해결된 문제”라면서



“(북일) 쌍방이 해결했다, 안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해결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우선 납치 해결의 기준을 논의,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송 대사는 “일본 민주당이 총선 과정에서 아시아 외교를 중시하는 주장을 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며 “만약 새 정권 발족 이후 (일본측 으로부터) 접촉이 온다면 실무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음. 그는 또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2002년 북일 평양선언이 유효하다고 밝히고 “(일본에 의한 한반도 식민지 지배라는) 과거를 청산하는 용단 아래, 관계개선을 하려 한다면 우리도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음.
- 평양선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당시 총리가 방북, 김정일 위원장과 양측간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 재개 등에 합의한 것임. 그러나 송 대사는 북한이 결코 북핵 6자 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반도 핵 문제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 근저에 있다”며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재차 요구했음.

● 하토야마 “북·일관계 개선 北대응에 달려”(9/11)

- 일본의 차기 총리로 취임하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는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새 정권 출범을 계기로 북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표시한 것과 관련, “전적으로 북한의 대응에 달려있다”고 밝혔다고 교도(共同)통신이 10일 전함. 통신은 하토야마 대표의 이런 발언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 등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함.
- 하토야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미사일을 여러 번 발사했고 핵개발과 핵실험을 했으며,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도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관계개선이 되지 않는 것은) 북한측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함. 국민신당의 지미 쇼자부로(自見庄三?) 간사장도 “신정권을 환영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평가하면서도 “납치, 핵 문제 등의 해결은 국제 협력을 통해서 북한에 압박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지적함. 후쿠시마 미즈오(福島瑞恵) 사민당 당수는 “새 정권 내에서 철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만 답함.

● <北, 日 정권교체 계기 관계개선 시도>(9/10)

- 북한이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이뤄진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하고 나서 배경과 추이가 주목됨. 아소 다로(麻生太郎) 정권에서 일본과의 공식 협상 채널을 전폐하다시피 했던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0일 교도(共同)통신과의 회견을 통해 2002년 평양선언을 거론하면서 ‘결실 있는 관계’를 들고 나왔기 때문임.



- 회견도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의 총리 선임(16일)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이뤄짐. 북한측이 향후 북일 관계에 대한 책임을 일본의 차기 정권으로 넘긴 셈임. 평양선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당시 총리가 북한을 방문,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측간 국교정상화 등을 위한 회담 재개 등에 합의한 것임. 물론 일본의 한반도 강점에 대한 사과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특히 김 상임위원장은 “(우리는) 일본 당국의 부당한 적대시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지, 일본 국민은 적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함.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 및 로켓 발사 등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면서 북한 기지 공격론까지 제기하던 일본에 대해 북한측이 극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과 비교할 때 확연히 달라진 내용임.
- 북한이 이처럼 일본에 대해 ‘구애’로 비칠 수 있는 발언까지 공개적으로 한 것은 차기 총리인 하토야마 대표와 민주당의 대북한 접근법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임. 물론 하토야마 대표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 그러나 그는 선거기간 토론회 등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북한과 대화와 협조를 모색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대화와 협조를 하되, 그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엔 우리로서도 강력한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대화와 압력의 병행이란 원칙에서 출발한 발언으로 볼 수 있지만, 대화와 협조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과거 자민당 정권과 차이가 적지 않음. 아울러 하토야마 대표는 지난달 “북일 관계가 진전될 경우 방북할 용의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대답한 적이 있음. 입장 표명을 유보했지만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었음.
- 결국, 북한으로서는 새로 출범하는 하토야마 정권이 대미정책은 물론 대북정책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보고 관계개선 의지를 시사하는 방식으로 일단 일본측의 반응을 보려 한 것으로 분석됨. 북한은 지난해 8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정권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 등에 합의했으나, 다음달 후쿠다 당시 총리가 퇴진하고 대북 강경론자인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리가 취임한 이후 일본과의 협상을 중단한 바 있음. 그런 만큼 북한의 대일 관계개선 움직임은 미국과의 양자 대화를 통한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이후 일본으로부터의 대규모 경제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도 있는 것으로도 관측되고 있음. 아직 북한의 이번 제의에 대한 민주당 차원이나 하토야마 대표 등 지도부의 시각은 공개되지 않고 있음. 공식적으로 정권을 출범하기 이전에 나온 제안인 만큼 오는 16일 총리 선출 및 차기 정부 구성 이후 공식 논의 과정을 거쳐야 이에 대한 입장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임.
- 다만, 북한이 장기간 냉각 상태에 접어들고 있는 북일 관계를 호전시



킬 실마리를 일본의 정권교체를 계기로 마련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아시아 외교를 중시하고 있는 민주당 정권에서 이번 북한측의 제안에 대한 대응은 대북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임.

● 北 김영남 “후계문제 논의되지 않아”(9/10)

- 김영남(金永南)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10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문제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함. 통신은 김 상임위원장이 이날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고 전함. 통신에 따르면 그는 “일부 외국 언론이 우리의 부상과 번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로 (그런 보도를) 내보낸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 우리 인민은 우리 공화국과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강하게 단결하고 있다”고 말함.
- 김 상임위원장은 또 일본의 차기 민주당 정권에 대해 2002년 북일 평양선언에 근거한 ‘결실있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호소함. 평양선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당시 총리가 방북, 김정일 위원장과 양측간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 재개 등에 합의한 것임. 그는 “(북·일 간) 관계 개선 전망은 어디까지나 일본 당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해 차기 민주당 정권의 대북 접근방식을 지켜보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힘. 그러면서 그는 일본의 한반도 강점에 대한 배상 등을 주요 이슈로 제기함.
- 김 상임위원장은 “(일본이) 평양선언을 존중하고 이 선언에 근거해 불행했던 과거를 진지하게 청산하고, 정치와 경제, 문화 및 다른 분야에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실 있는 관계를 맺게 되면, 양국 국민의 희망을 충족시킬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 일본의 정권교체 이후 북일 관계의 향방이나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 문제에 대해 북한 지도부 일원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임. 김 상임위원장은 “21세기가 돼도 가깝고도 먼 관계를 타파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우리는) 일본 당국의 부당한 적대시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지, 일본 국민은 적이 아니다”라고 말해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희망을 숨기지 않았음. 그는 또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김 위원장이 당과 정부, 군을 정열적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강조함.

● 日 교도통신 사장 방북(9/8)

- 이시가와 사토시 사장을 단장으로 한 일본 교도통신사 대표단이 8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함. 중앙통신은 그러나 교도통신의 방북 목적과 일정은 소개하지 않았음.



마. 기타

● “김정일 3남 이름 ‘정은’으로 판단”(9/11)

- 대북 소식통은 11일 “정부 유관 당국은 최근 김 위원장 3남의 정확한 이름이 기존에 알려진 ‘정운’이 아니라 ‘정은’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통일부와 정보 당국자 등은 이에 대한 공식 확인 요청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 통일부 당국자는 이어 “김정일 가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일 수밖에 없다”며 “그 부분(3남의 정확한 이름)은 향후 계속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3남 이름이 원래 ‘정운’이었다가 후계자로 지명되면서 ‘정은’으로 개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그동안 김 위원장 3남의 이름은 김 위원장의 전속 요리사로 활동했던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藤本建二) 씨의 증언 등을 통해 ‘정운’으로 알려져 왔음. 그는 1982년부터 1983년까지 2년간 북한에서 요리사로 일했고 이후 1987년 재입북했다가 2001년 4월 김 위원장을 위한 최고의 성계를 사러 간다며 북한을 떠나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음.
- 일본 마이니치(毎日) 신문은 최근 자체 입수한 북한 내부 문건에 ‘김정운’으로 알려진 김 위원장 3남 이름이 ‘김정은’으로 표기돼 있었다고 지난 8일 보도했음.
- 이 신문은 또 입수한 북한 문서에 ‘김정은 대장은 군사적 안목이 넓고 실력이 비할 데 없이 높다’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는 우리의 군대와 인민을 지도해온 유일무이한 분의 후계자’라는 등 김씨를 추켜 세우는 문구들이 들어 있었다고 보도했음.

● <北평양에 첫 러시아상품 전문상점 개점>(9/11)

- 북한의 평양에 러시아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상점이 생겼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1일 전했다. 북한의 금영합작회사가 운영하는 이 상점은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원동지역 권천식 위원장과 러시아 웨네라 유한책임회사의 정혜성 사장 등 러시아의 고려인들이 투자했음.
- 평양시 중구역 동흥동에 현대적인 건물을 세우고 지난 3월초 개점한 이 상점은 러시아제 남녀 계절옷과 가방, 신발, 화장품을 비롯한 경공업 제품, 보드카를 비롯한 식료품을 판매함. 1층의 상점과 2층의 식당은 언제나 손님들로 붐비며, 3층에는 현재 첨단과학기술자료 봉사실이 건설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 <독일 통일 크게 우려했던 英·佛 정상들>(9/10)

- 프랑스와 영국이 동·서독의 통일을 매우 두려워해 두 나라 정상이 당시 수차례 비밀 회동을 했다는 내용의 영국 외교문서가 공개됨.



-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미리 입수해 9일자 신문에서 전한 내용에 따르면 프랑스와 영국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던 당시 장차 통일된 독일이 유럽의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해 영토 확장의 야욕에 휩싸일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드러남. 특히 프랑수아 미테랑 당시 프랑스 대통령은 통일 독일이 히틀러가 과거 그랬던 것보다 더 많은 영토를 집어삼킬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나타남.
- 영국 외무부는 독일 통일 과정 당시 영국 총리실의 외교보좌관이었던 찰스 포웰이 작성한 메모 등 외교문서를 10일 공개할 예정임. 독일 통일 과정에서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와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강하게 반대했다는 것은 국제정치사에서 익히 알려진 사실임. 대처는 특히 국제회의의 석상에서 이런 반대의 뜻을 자주 표출했었음.
 - 그러나 FT는 이 외교문서들에는 독일의 통일에 대해 두 나라가 얼마나 겁을 먹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있음. 1998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고 2주 후 헬무트 콜 서독 총리는 다른 유럽 국가나 집권 정당과 상의도 없이 독자적인 통일 플랜을 전격 발표함. 찰스 포웰의 메모에 따르면 대처와 미테랑은 이 문제를 놓고 비밀 양자회담을 수차례 갖고 양국이 가진 독일 통일에 대한 우려를 공유함.
 - 그해 12월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공동체(EC) 정상회의에서도 두 정상은 은밀히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미테랑은 콜 서독 총리의 통일계획이 독일의 민족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며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냄. 이듬해인 1월에도 두 정상은 엘리제궁에서 오찬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미테랑은 독일이 통일되면 '나쁜 과거'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통일 독일이 히틀러가 과거 그랬던 것보다 더 많은 영토를 집어삼킬 수 있다고 말함.
 - 미테랑은 이어 독일이 유럽에서 영토 확장을 하게 되면 소련이 틀림없이 영국에 밀사를 보내 독일의 침공에 대비해 상호 상호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제의해올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유럽이 1차 세계대전 이전 대립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FT는 전함. 외교 문서들에는 이밖에 독일 통일을 놓고 시각차를 빚은 대처와 영국 외무부 간의 갈등도 드러나 있음. 당시 영국 외무부는 대처 총리가 독일의 통일에 대해 너무 비판적인 의견이라는 점을 우려했고 대처는 외무부가 너무 안이하다고 생각했던 것.
 - 대처는 외무부의 조언을 무시하고 국제 외교무대에서 독일의 통일에 비판적인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크리스토퍼 말러비 서독 주재 영국대사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였지만, 나중에는 말러비 대사 역시 독일 통일에 대해 너무 부드럽게 생각하게 됐다고 FT는 전함.



◎ <인터뷰> ‘北 무기 운송’ 伊 오팀 대표(9/10)

- 이란으로 향하던 도중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압류된 북한제 무기가 든 컨테이너의 운송을 담당한 이탈리아 오팀(OTIM)사 마리오 카르니글리아(68) 대표는 연합뉴스와 한 단독 인터뷰에서 해상운송 일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공개함. 지난 8일 오후(한국시간 9일 오전) 로마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카르니글리아 대표는 그러나 컨테이너에 든 화물이 무기인 줄은 몰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북한 측 수출기관의 이름을 밝히는 것도 끝내 거부함.
- 무기 압류 사건 발생 후 카르니글리아 대표가 언론과 대면 인터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임. 그는 “지난 2000년부터 북한에 들고 나는 물품들의 운송을 담당해온 이후 이번이 첫 사고”라며 “(무기가 실렸다는) 컨테이너가 압류됐다고 해서 물질적 손실은 없지만, 마치 회사가 무기수송에 깊이 관여한 것처럼 알려져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고 말함. 그는 지금까지 4~5 차례 평양을 방문했다고 소개하면서 “북한의 정치인을 만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밝힘.

-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

- 북한과는 어떻게 사업 인연을 맺게 됐나: ▲우리는 1975년부터 중국 베이징(北京)에 사무소를 열고 중국 관련 사업을 해왔음. 로마 주재 북한 대사관의 추천으로 2000년부터 북한에 물자를 운송하는 일을 해왔음.
- 주로 북한에 어떤 물건들을 공급해왔나: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품, 타일 등 건축자재 등 온갖 물품들임. 또 이탈리아 피아트 자동차의 터키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분해해 컨테이너에 실은 뒤 북한 남포항에서 재조립하는 식의 사업도 함. 북한 맥주의 병입(보틀링) 사업도 하고, 관광사업도 함.
- 컨테이너가 북한을 출발한 것은 언제인가: ▲(서류를 보며) 남포항에서 5월30일에 출발했음. 중국 다롄(大連)을 출발해 상하이(上海)로 향한 것은 6월13일임.
- 일부 미국 언론매체는 UAE 코르파칸항에서 적발된 정기 대형화물선 ANL 오스트레일리아호(이하 ANL호)에 컨테이너가 실린 장소가 다롄항이라고 보도했는데: ▲잘못된 보도임. 다롄항은 ANL호의 정기노선 경유항에 들어 있지 않음. 남포에서 다롄까지는 북한 선적 연안수송선이 운반했고, 다롄에서 상하이까지는 중국 선적 연안수송선이 운반했음. ANL호에 컨테이너가 옮겨진 곳은 상하이임.
- 무기가 실린 것을 정말 몰랐나: ▲컨테이너가 남포항에서 올 때부터 봉인돼 있었음. 그래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었음.
- 북한 측 수출업자는 누구인가: ▲사업윤리상 수출업자 이름은 밝힐 수 없음. 양해해달라.
- 그럼 주문한 회사는 어디인가. 이란 혁명수비대와 관련있는 TSS라



- 는 설이 있는데 사실인가: ▲이란업체가 아님. 우리가 갖고 있는 운송서류에는 중국업체 C사로 돼있음. 우리는 그냥 중국에서 이란까지 운송만 맡았음.
- 미국 언론에서 오팀 사 직원이 직접 ANL호에 승선했다고 보도했는데 맞나: ▲ANL호에 실린 컨테이너가 수백개임. 겨우 컨테이너 10개 때문에 직원이 승선했겠는가.
- 무기가 실린 컨테이너고 압류됐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았나: ▲운송을 의뢰한 중국운수업체로부터 화물이 코르파칸항에서 압류됐다는 것을 통보받은 오팀의 중국 지사 직원이 알려와 알게 됐음. 그러나 C사의 연락은 무기가 실렸다는 내용은 아니었음. 북한제 무기라는 말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음. 지금도 믿기지는 않음.
- 정상적인 화물이라면 50여일째 압류돼 있는 상황에서 화주나 의뢰인이 화물 반납 등 후속처리를 요구해야 하지 않나? 연락은 있었는가? ▲지금까지 북한 측 수출인이나 중국측 의뢰인으로부터 아무런 질문이나 요구를 받은 바 없음. 화물은 현재 코르파칸항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물건 위치 등을 추적해볼 생각임.
- 북한에는 자주 가는가: ▲4~5번 정도 갔음. 평양에서 골프를 친 적도 있음. 최근에 간 것은 3년 전임. 난 자주 못가지만 베이징 지사에 있는 직원은 정기적으로 북한에 감. 원래는 다음 주에도 베이징지사 직원이 평양에 갈 예정이었음.
- 북한 고위층과도 친분이 있을 것 같은데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고위급 인사를 만난 적은: ▲(크게 웃으며) 전혀 없음. 북한 정치인들과는 만난 적이 없고 사업 관련 인사들만 만났음.
- 컨테이너 압류로 손실을 입지는 않았는가: ▲물질적인 손실은 없지만,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음. 앞으로 북한과 거래할 때는 더 조심해야겠음.
- 이번 일로 오팀 사가 유엔 등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함.
- 북한과는 사업을 계속할 생각인가: ▲그러함. 북한과의 사업이 쉽지 않지만 계속함. 아직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대리석 절단기를 보내줄 수 있느냐는 북측의 문의가 있었음. 대리석 절단기를 어디에 쓰려는지는 나도 알 수 없음. 최근 유경호텔 공사를 재개한다는 보도를 봤는데 거기에 쓰려는 건지도 모르겠음.
- 최근 평양에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오픈했는데 거기에 관여했나: ▲(웃으면서) 아님.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문을 열었다는 소식을 신문을 통해 알았음.
- 남한 쪽과는 사업을 안 하는가: ▲에이전트가 있지만 이름을 밝히기는 곤란함. 남한 쪽에는 주로 이탈리아제 기계류와 가구류 수출품을 운송함. 우리는 박람회 등 각종 대형 전시회 개최도 하는데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에 기대를 걸고 있음.



● ‘北무기 컨테이너’ 2차핵실험 5일후 선적(9/10)

- 북한제 무기를 싣고 이란으로 향하다 아랍에미리트(UAE)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진 컨테이너는 북한의 2차 핵실험 닷새 후인 지난 5월 30일 북한 선적 연안수송선에 실려 남포를 출항한 것으로 확인됨. 또 이 컨테이너는 소형 연안수송선에 실려 북한 남포-중국 다롄(大連)-상하이(上海)를 거치는 복잡한 경로로 운송된 다음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시점에 호주 선적 정기 대형 화물선인 ANL 오스트레일리아호(4만7천326t급.이하 ANL호)에 옮겨져 이란으로 향한 것으로 드러남.
- 지난 7월22일 UAE 당국에 적발돼 코르파칸항에 50여 일째 압류된 이 컨테이너에 대해 UAE 당국은 아직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과 중국 측 화물운송 의뢰인도 운송업체에 아무런 요구나 질문도 하지 않은 채 침묵하는 상태임. 컨테이너 운송을 맡았던 이탈리아 국제운송업체 오팀(OTIM) 사의 마리오 카르니글리아 대표(68)는 지난 8일 오후(한국시간 9일 오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연합뉴스와 단독으로 만나 이같이 밝힘.
- 카르니글리아 대표에 따르면 봉인된 40피트짜리 컨테이너 10개는 지난 5월 30일 북한 선적 연안수송선에 실려 남포를 출항했음. 이는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이뤄진 지 닷새만임. 컨테이너는 이틀 후 다롄에 도착해 10여일 대기하다가, 유엔이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채택한 다음날인 6월13일 중국 선적 연안수송선 편으로 다롄을 출발해 6월15일을 전후해 상하이에 도착함.
- 컨테이너는 상하이항에서 다시 2주가량 대기한 후 대형 화물선 ANL호가 부산을 경유해 6월 29일 상하이에 입항하자 이 배에 옮겨짐. ANL호는 같은 날 화물 목적지인 이란 반다르압바스항을 향해 출항했고, 7월 22일 아랍에미리트(UAE) 코르파칸항에 들렀다가 UAE 당국에 의해 북 컨테이너가 압류됐음. 컨테이너에는 로켓 추진 폭탄과 자동화기, 탄약 등 무기가 담긴 것으로 앞서 보도된 바 있음.
- 이는 다롄항에서 ANL호에 선적됐다거나 8월14일 UAE에서 압류됐다는 등 외신들의 그간 추정 보도를 바로잡는 내용임. 카르니글리아 대표는 또 인터뷰에서 화물 운송을 의뢰한 주문업체가 중국의 C사라고 밝힘. 그는 운송을 의뢰한 업체가 이란 혁명수비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인 TSS라는 한 미국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해, “그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며, 내가 의뢰받은 것은 이란 업체가 아니라 분명히 중국 업체였고, 우리는 중국에서 이란까지 운송을 맡은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 카르니글리아 대표는 그러나 남포에서 출항한 컨테이너를 수출한 북한 측 기관 명칭은 끝내 밝히지 않았음. 그는 “사업윤리상 수출기관의 이름은 밝히기 어렵다”며 “컨테이너는 남포항에서 출발할 때부터 원래 봉인돼 있었기 때문에 내부를 볼 수 없었고, 선적서류



에 적힌 대로 ‘오일펌프’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며 무기가 실린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되풀이함.

- 그는 정상적 화물이 50여 일째 억류돼 있다면 북한과 중국 측 발주자로부터 화물 반납 등 사후처리 요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직 양측 모두로부터 아무 질문이나 요구도 없었다”고 답함. 압류한 무기의 처리 문제와 관련, UAE 당국은 유엔 제재위원회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유엔 외교관과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 압류 당국이 이 무기를 폐기 처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파키스탄, 우라늄 첫 농축→무기화까지 6년(9/9)

- 북한이 우라늄 농축 기술을 원천 이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파키스탄은 우라늄 농축에 첫 성공한 뒤 이를 무기화하는데까지 6년이 걸린 것으로 알려짐. ‘파키스탄 핵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는 압둘 카디르 칸 박사는 지난달 말 파키스탄 현지 방송에 출연, 파키스탄 핵개발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8일 확인됨.
-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오픈소스센터가 이날 공개한 칸 박사의 지난달 31일 파키스탄 방송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1978년 처음으로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우라늄 농축에 성공했으며, 6년여 뒤인 1984년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폭탄 개발에 성공함. 이는 최근 우라늄 농축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한 북한의 경우에도 고농축우라늄(HEU) 핵폭탄 개발이 완료되기까지는 최소한 수년 이 필요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임.
- 칸 박사는 인터뷰에서 “1978년 4월 6일 첫 원심분리 농축우라늄을 획득했다”면서 “하지만 당시에는 저농축 우라늄이었다”고 말함. 그는 이어 “(연구를 거듭한 끝에) 60%의 (농축) 결과를 얻었고, 수많은 도전을 극복한 끝에 1983년 초 (무기화가 가능한) 90%의 농축을 이뤄냈다”고 전함.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폭탄 개발을 위해서는 천연 우라늄을 정제해 그 속에 포함된 우라늄(U) 235 동위원소를 90% 이상 농축해야 함. 칸 박사는 ‘언제 우라늄 핵폭탄 개발이 완료됐느냐’는 질문에 “1984년 12월 핵폭탄이 준비됐으며, 1주일 내에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공개함.
- 그는 북한과 파키스탄간 핵커넥션 의혹과 관련, 북한 기술진이 1990년대 중반 파키스탄의 카후타 핵시설을 방문해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음을 시인함. 하지만 그는 “핵 기술은 핵 시설을 방문하거나 일부 장치들을 보는 것만으로는 획득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입수하는 대가로 자신이 파키스탄의 핵기술을 북한에 넘겨줬다는 주장에 대해 “무고”라고 강하게 부인함.
- 그는 또 페르베즈 무샤라프 전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P-1형 원심분리기가 2001년 파키스탄에서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공개한데 대해 “그럴 수 있다”면서도 자신은 이와 관련이 없음을 강조함. 그는 파키



스탄의 핵기술이 나쁜자들의 수중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것은 서방의 선전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칸 박사는 파키스탄과 북한간의 커넥션 시발점과 관련, 인도와 대결하고 있던 상황에서 미사일 기술이 필요했으며 북한과의 거래를 시도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함. 그는 “1994년 미사일 기술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으며, 이후 북한 사람들이 파키스탄에 와서 베나지르 부토 당시 총리로부터 돈을 수령했고, 이후 우리는 미사일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었다”면서 “그렇게 많은 비용은 들지 않았고, (북한에 준 돈이) 5천만달러 정도였던 것 같다”고 말함.
- 그는 자신이 1999년 다시 북한을 방문했음을 시인하면서 “당시 무사라프 군 참모총장이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을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우리는 북한에 가서 200기의 미사일을 구매했다”고 전함. 이 밖에 그는 이슬람 국가인 이란에 대해서는 “이란은 중요한 이슬람 국가로 이란이 핵기술을 획득하기를 원했다”면서 “(핵 장비) 공급자들과 접촉해서 장비를 구입하도록 조언을 했다”고 말해 기술 협력이 이뤄졌음을 시인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靑 “비핵화 위한 북미대화 적극 지지”>(9/13)

- 청와대는 13일 미국 국무부가 최근 북한과의 양자대화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한 핵심 참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라면 북미 직접대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면서 “이는 현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음.
- 그러면서 일각에서 지적하는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가능성에 언급, “북미간 접촉은 지금도 한국과 미국 정부에서 충분한 협의하에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설명했다.
- 외교안보라인 고위 관계자도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북미대화를 반대할 적이 없다”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라도 지지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미 국무부가 북미 직접대화 준비에 대해 언급했으나 북한의 호응이 전제돼야 하므로 분위기가 무르익으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임박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음.
- 특히 그는 “미국의 의도는 북미대화가 6자회담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북한을 6자회담 틀로 다시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정책이 선화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나. 한·중 관계

● 韓中우호주간, 청두·충칭서 개최(9/11)

- 한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과 우호 증진을 위한 '2009 한중 우호주간' 하반기 행사가 내달 14일부터 서부대개발의 핵심 지역인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와 충칭(重慶)시에서 개최됨. 주중 한국대사관은 재중국 한국상회와 코트라, 무역협회 등과 협조해 내달 14-16일 두 도시에서 우호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 우선 14일 충칭에서 우호주간 개막식을 시작으로 투자환경 설명회, 무역투자상담회, 양국 기업인 간 교류행사 등이 펼쳐지며 15일에는 청두시로 장소를 옮겨 중국 정부가 개최하는 서부박람회 행사에 참여함.
- 이곳에서는 한국-쓰촨성 투자환경 설명회와 서부 박람회 개막식이 진행되며 16일부터 19일까지 코트라가 주관하는 한국 우수 상품전도 개최됨. 충칭과 청두는 중국 서부지역의 발전을 견인해 온 지역으로서 금융위기 발생 이후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주중 대사관은 우호주간과 서부박람회 행사를 통해 한국 상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세일즈 외교'에 적극 나설 계획임. 이번 행사에는 중국에 진출한 에너지 IT 금융, 건설 등 각 분야의 기업 70여곳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됨.

다. 한·러 관계

● 한-러 극동분과위, 교류협력방안 논의(9/10)

- 한국과 러시아는 9일 오후 러시아 극동 하바롭스크에서 '한-러 극동 시베리아 분과위원회'를 열어 양국 간 교류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함. 김은중 외교통상부 유럽국장과 카시아노프 러시아 지역개발부 국제관계 부국장 등 양국의 공무원, 기업인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양국은 극동 시베리아 지역 에너지 자원 개발 등을 포함한 투자 프로젝트와 통상증진, 건설, 농수산업, 관광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 특히 통상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통관지연 문제와 노동비자 쿼터 확대 문제 등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으며 한-러 수교 20주년이 되는 내년에 양 지역에서 다채로운 협력사업을 펼치기로 함.
- 또 러시아 경제특구 내에서 상호 협력 활성화 방안과 공동 프로젝트를 금융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고 양국의 실질적인 협력강화를 위해 지자체 및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포럼'을 분과위 산하에 설치, 개최하기로 합의함. 이밖에 양측은 6차 분과위를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함.



라. 미·중 관계

● 中 우방귀, 오바마와 첫 회동(9/11)

- 중국의 권력서열 2위인 우방귀(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10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처음으로 회동함. 관영 신화통신은 우방귀 위원장이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 양국 관계와 국제 및 지역문제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을 논의했다고 11일 보도함. 두 지도자는 양국간 정치적 신뢰 구축 및 국제 금융위기 대응 문제,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우방귀 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이후 백악관을 찾은 중국의 최고위직 인사로,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공식 방미는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건 직전 완리(萬里) 당시 위원장의 방미 이후 20년만의 일임. 우 위원장은 또 조 바이든 부통령, 펠로시 하원의장,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등과 만나 양국 관계 발전방안을 논의했으며 헨리 키신저 등 전직 주요 인사들과도 면담함.
- 클린턴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조만간 테러문제에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하고 “역사와 경험이 다르지만 솔직하고 개방된 자세로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우 위원장은 “방미의 목적은 양국 정상간 합의한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함”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매우 좋은 분위기에서 회담을 나눴다”고 말함.

● 中 주일대사, 미-중 ‘G2론’ 경계(9/10)

- 중국의 추이텐카이(崔天凱) 주일대사는 10일 미-중 양국이 국제문제를 주도한다는 이른바 ‘G2론’에 대해 중국은 찬성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힘. 추이 대사는 이날 도쿄에서 가진 강연에서 중국은 “몇몇 국가들의 세계지배” 대신에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지지한다고 강조함.
- 그는 ‘G2론’이 미국과 중국이 세계 지도국 지위를 공유하는 의미라면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지구의 한쪽 반구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지향하는 가운데 복잡하고 심각한 국내 문제를 안은 개발도상국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함.
- ‘G2론’은 2006년 이래 미국 학계에서 제기돼 왔으며, 지난 1월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수교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이를 다시 거론하면서 주목돼 왔음. 특히 지난 4월 런던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연례 전략 대화를 열고 ‘모든 차원에서’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G2론’이 크게 부각됐음.



- 추이 대사는 또 “세계 주요 7개국(G7)과 8개국(G8)이 국제문제를 풀지 못하는 가운데 단지 (미-중) 두 나라에 의한 세계 거버넌스를 생각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이 대사는 일본의 차기 민주당 정부가 중국, 아시아 국가와 관계를 강화하는 정책이 미-일 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배치되지 않는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힘.

● 中 전인대위원장, 20년만에 미국 방문(9/7)

- 중국의 권력서열 2위인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전인대 위원장으로서 20년만에 미국을 공식 방문함. 우방궈 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주도인 피닉스 공항에서 도착해 12일까지의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7일 보도함.
- 쟈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의 영접을 받으며 도착한 우 위원장은 도착 직후 공항에서 배포한 발표문에서 “중국과 미국은 수교 30년 이래 이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활력넘치고 발전 잠재력이 큰 양자관계로 발전했다”면서 “양국 관계는 현재 더욱 중요한 발전적 기회를 맞고 있다”고 말함. 그는 “나의 미국 방문은 전인대 위원장으로서 20년만에 이뤄진 일”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간에 달성한 공동 합의사항을 구체화하고 더욱 적극적인 협력을 이뤄내겠다”고 말함.
-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공식 방미는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건 직전 완리(萬里) 당시 위원장의 방미 이래 20년 만에 이뤄진 것임.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우 위원장은 8일 워싱턴을 방문,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펠로시 하원의장 등 주요 지도자들과 면담해 지구온난화 문제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 미·일 관계

● 하토야마 “핵 밀약 조사후 공개”(9/11)

- 일본의 차기 총리로 취임하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가 미·일 양국 간의 ‘핵 밀약’ 문제와 관련,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다. 진상을 밝히고 싶다”고 밝힘. 하토야마 대표는 10일 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을 포함해 조사가 필요하지만, 그 결과가 나오는 단계에서 국민에 알리고 싶다”고 말해 진상조사를 한 뒤 공식적으로 발표할 방침임을 분명히 함.
- 앞서 하토야마 대표는 외상에 내정된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간사장과 함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을 만나 핵 밀약 규명을 위해 협력하기로 함. 시이 위원장은 공산당이 그동안 수집한



관련 자료를 민주당측에 제공함. 이 자료에는 미국 정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지금은 입수하기 어려운 것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미·일, 해상자위대 철수 놓고 이견(9/10)

- 제프 모렐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9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민주당, 사민당, 국민신당 등 연립정권이 검토하고 있는 인도양에서 다국적군 함대에 급유지원활동을 하는 해상자위대의 내년 1월 철수 방침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가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음.
-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모렐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일본의 참가에 의해 우리도, 세계도 큰 혜택을 입고 있는 만큼, (인도양에서 해상자위대의 급유지원) 활동을 계속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며 재고를 요청함. 3당이 9일 발표한 연립정권 정책합의에서 급유지원 활동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앞서 3당 간사장급 협의에서는 현행법이 만료되는 내년 1월에 해상자위대를 철수기로 구두로 합의한 바 있음.
- 모렐 대변인은 또 연립정권이 재고하기로 한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설 계획 및 미·일 지위협정과 관련한 종전의 합의 이행도 강조함에 따라 3당 간 논란 끝에 마련한 연립정권의 외교 분야 합의가 향후 미·일 관계의 마찰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됨. 모렐 대변인은 “새 정권은 미·일 동맹을 아주 중시하고 있다고 들었다. 정권이 교체돼도 동맹강화 방침은 계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해상자위대의 급유지원활동에 대해서는 “일본은 대국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에 최대한 공헌해야 할 국제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이어 그는 “선거 운동과 통치에는 차이가 있다. 통치하는 측이 되면 동맹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된다”고 거듭 민주당과 하토야마 대표를 압박함. 이에 대해 하토야마 대표는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미국측으로부터 정식으로) 요청받은 바 없다”며 철수를 검토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함. 사민당의 시게노 야스마사(重野安正) 간사장은 “급유활동 계속 요구는 미국의 입장이다. 그에 따라 우리의 방침이 변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함.

○ <日, 민주 연립정권 대미외교 주목>(9/10)

- 이달 중순 출범할 일본의 민주·사민·국민신당의 연립정권이 마련한 외교·안보 정책이 미국측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향후 미·일 관계 추이가 주목됨.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와 후쿠이 미즈호(福井瑞穂) 사민당 당수, 가메이 시즈카(亀井靜香) 국민신당 대표가 9일 연정 수립에 정식 합의하면서 발표한 ‘연립정권 정책합의’에는 대등한 외교를 강조하는 사민당의 요구가 적



- 지 않게 포함돼 있기 때문임.
- 민주당은 당초 외교·안보 분야 정책의 경우 집권당으로서의 현실 노선을 우선할 생각이었음. 그러나 ‘이념’을 중시하는 사민당이 제동을 걸면서 막판까지 난항을 겪은 끝에 최대 핵심인 미·일 지위협정과 주일미군 재편 문제의 경우 사민당측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됨.
 - 민주당은 아시아 중시하면서 미국 중심의 세계화를 비판해 온 하토야마 대표에 대한 미국측의 경계, 그리고 하토야마 대표가 총리 취임 이달 이달 하순 미국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 점을 고려해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내용으로 정책합의를 할 계획이었음. 이에 따라 사민당 정권에 대해 ‘대미추종형 외교’라고 비판해 온 민주당이었지만, 연립정권 협의 과정에서는 미·일 지위협정 개정 문제나 주일미군 기지 재검토 등은 아예 제시도 하지 않았음.
 - 그러나 사민당이 이들 문제는 물론 인도양에서의 급유활동, 그리고 소말리아 해적 대책 등을 위해 해외로 파견한 해상자위대의 철수 및 비핵 3원칙 견지 원칙을 명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음. 결국, 연립정권 출범 이전부터 3당 간 갈등이 두드러지는데 대한 부담을 느낀 민주당이 대미정책 부분을 상당 부분 양보하는 방식으로 조기 수습에 나섬.
 -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미·일 지위협정 개정 제기, 주일미군 재편 및 기지 운용 재검토라는 표현이 정책합의에 포함되면서 미국측을 자극할 소재가 되고 말았음. 외상에 내정된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간사장은 “미군 재편에 대해서는 이미 양국 정부간 합의가 끝난 사안이라고 미국측은 주장하고 있다”며 “양 정부가 합의한 것을 포함해 확실하게 논의를 제기하겠다”라고 연립정권 정책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함.
 - 그러면서도 그는 “미군 재편, 기지 문제, 지위협정을 한꺼번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순번을 정해서 추진해야 해결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이달 하순 예정된 하토야마 대표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들 문제를 한꺼번에 제기하지는 않겠다는 뜻임. 동시에 연립정권 출범에 맞춰 대등한 미·일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외교·안보 정책에 합의했지만, 정권 출범 이후 대미 외교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들 쟁점의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힘.
 - 사민당이 당초 강하게 요구했던 인도양에서의 다국적군 함대에 대한 급유활동에 나선 해상자위대의 즉각 철수 주장을 정책합의에 포함하지 않는 데 대해 양해한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미국측에 대한 성의를 표시한 것으로 내세울 수 있음.
 - 한편, 존 루스 주일 미국대사는 10일 자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과의 회견에서 “대등한 미·일 관계를 주장하는 민주당 주도의 정권이 탄생했지만, 새 정권과 계속해서 강하고 긍정적이면서도 생산적인 관계를 계속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힘. 그 또 “미·일 관계는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 경제적인 초석"이라며 "안보 분야에서 미·일 간 연대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함.

바. 미·러 관계

● 러 외무 "美-러 신뢰 위해 냉전사고 극복 필요"(9/8)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8일 러시아와 미국이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선 냉전시대의 부정적 유산을 극복하고 서로 양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조지 부시 미 행정부 하에서 훼손됐던 양국 관계가 최근 들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함.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러시아 정부 기관지인 로시스카야 가제타에 기고한 글에서 "양국 관계를 새롭게 하는 열쇠는 지난 수 년 간 훼손됐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부정적 유산을 극복하는데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며 서로 타협하고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함.
- 그는 "신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냉전 종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데서 기인한다"면서 "(양국 관계가 좋아지려면) 관성적으로 러시아와의 동등한 관계를 마땅치 않게 여기는 미국 내 특정 세력의 반대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함. 그는 그러나 "최근들어 상호 불신이 해소되면서 양국 관계가 개선돼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음.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푸틴-부시 정권에서 동유럽 미사일방어(MD) 계획,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확대, 코소보 독립 등으로 냉전 이후 최악의 관계를 보였지만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 해빙 분위기가 급격히 조성된 상태임.
- 라브로프 장관은 특히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정이 제때, 완벽히 끝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 협정은 양국에 전략적 안정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7월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START-1 후속 협정 초안의 양해각서에 서명함. 이와 관련해 라브로프 장관은 3일 협상 결과가 이달 말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 때 양국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설명함.

사. 중·일 관계

● 원자바오 "日 새 정부 '하오하오'"(9/10)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오는 16일 차기 일본 총리로 선출되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의 대중국 정책을 찬양하고 중일관계 개선을 기대함. 원 총리는 9일 베이징에서 일본 게이단렌(經團連) 대표단과 만나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일본 민주당 대표의 적극적인 태도에 감사하며 일본의 새 정부와 대화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함.



- 원 총리는 또 “어떤 나라나 지역도 혼자서는 세계 금융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세계 경제대국인 중국과 일본은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며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함. 일본 최대 경제단체 게이단렌 회장인 미타라이 후시오(御手洗富士夫)는 140명의 재계 대표들을 이끌고 일주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있음.

아. 기타

● 한·뉴질랜드 “FTA 협상안 도출 노력”(9/12)

- 한국과 뉴질랜드는 11일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제14차 정책협의회를 열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현황을 평가하고 설득력 있는 협상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외교통상부가 12일 밝혔음.
- 이용준 외교부 차관보와 존 맥아더 뉴질랜드 외교부 차관보는 이번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등 지역협력체에서도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음. 양국 차관보는 또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지역 정세와 동아시아 공동체의 실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음.
- 이 차관보는 특히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와 내년 한국전 6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뉴질랜드 측의 관심을 요청하고 한국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에 대한 지원을 당부하면서 연인원 쿼터를 완화하거나 철폐해 줄 것을 희망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 이 차관보는 이에 앞서 존 앨런 외교차관을 만나 양국 관계와 주요 국제 이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음.
-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의 뉴질랜드 국민 방문을 통해 마련된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토대로 2년 반 만에 열린 것”이라며 “양국간 모든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음.

● 한·스웨덴 과학기술협력협정 서명(9/11)

-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1일 스톡홀름에서 토비아스 크란츠 스웨덴 고등교육연구부 장관과 ‘한·스웨덴 과학기술협력협정’에 서명했다고 외교통상부가 11일 밝혔음.
- 이번 협정은 정보통신, 생명공학, 나노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간 정보·인적 교류를 강화하고 이를 점검·추진하기 위해 한·스웨덴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외교부는 이번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로 향후 정보통신, 태양전지 등 녹색기술 분야의 세계적 선도국인 스웨덴과 과기분야 협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음.



● “亞경제 회복 서구보다 빠를 것” <FT> (9/11)

- 아시아 각국의 경기 회복세가 서구보다 훨씬 빠를 것이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 전문가 진단과 각종 전망치를 인용해 보도함. 실제 세계은행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 6.5%에서 6월 7.2%로 수정하는 등 아시아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이 상향 조정되면서 이 지역 경기가 일시적인 회복 후 침체를 보이는 ‘W자형’이 아니라 ‘V자형’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가 일고 있음.
- FT가 인용한 경제전망 조사기관 ‘컨센서스 이코노믹스’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올해 -1.5%에서 내년 3.5%, 중국은 8.3%에서 9.3%, 일본은 -6.1%에서 1.3%, 인도는 6.2%에서 7.2% 등으로 모두 상승할 것으로 예측함.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이종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지역의 급속한 경기회복세가 지난 1997~9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던 때와 유사하다면서 “아직 확실하게 회복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V자형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말함.
- ADB는 올해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률을 3.4%로 전망했지만 이달 중 나오는 전망치에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짐. 이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6~7%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봄. 바클레이스 캐피털의 아시아 신흥국 연구책임자인 피터 레드워드도 아시아 경제가 급속히 회복되는 데 몇 가지 이유가 있다면서 대규모 채고 비축, 복잡한 파생상품의 비중이 적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을 실어주는 높은 저축률 등을 주요인으로 꼽았음.
- 단기적으로 서구의 수출 수요 감소와 성급한 출구전략 구사가 아시아 경기회복에 저해 요인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주요 20개국(G20)이 경기부양 의지를 보여주는 상황에서 그 같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출구전략을 구사하더라도 현재 아시아 각국의 이자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함. 서구의 수요가 약화된 상황에서도 아시아 지역의 경제가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음.
- HSBC의 프레데릭 노이만 아시아담당 수석연구원은 아시아에서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이 서구보다 강하다면서 “금융위기가 서구의 일이며 아시아는 성장을 구가하던 시절로 재빨리 돌아갈 것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고 말함. 한편 컨센서스 이코노믹스는 아시아 각국의 경기를 예보 형식으로 나타내면서 한국은 현재 ‘성장에 먹구름이 끼어 있고, 맑은 하늘은 보이지만 문제는 지속되는’ 날씨로 진단함. 또 일본은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질풍이 불 수 있는’ 상황, 중국은 ‘전망이 급속히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 여름은 아닌’ 상황으로 묘사함.



● 원자바오 “위안화 국제통화에 상당시간 필요”(9/10)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10일 위안화가 진정한 국제통화가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가 보도함. 원 총리는 이날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에서 개막한 세계경제포럼(WEF.일명 다보스포럼) 하계대회 기조연설을 통해 위안화의 국제통화 문제와 관련, “지금 어떤 시간표도 생각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함.
- 그는 그러면서 “한 국가의 통화가 국제적으로 승인받아 주요통화가 되느냐는 그 나라의 경제 실력을 감안해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함. 최근 중국 밖에서 유통되는 위안화 규모가 갈수록 커져 국제시장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
- 원 총리는 위안화가 되도록 많은 국가들의 인정을 받아 통용되기를 원하지만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중국은 자신의 실력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그는 또 중국이 아직 개발도상국이어서 위안화의 국제화에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며 일정한 국력에 도달하지 못하면 서두른다고 해도 이룰 수 없다고 덧붙였음.

● 日 민주·사민·국민신당 연정 합의(9/10)

- 일본 민주당과 사민당, 국민신당이 9일 연립정권 출범을 위한 정책 협상을 타결하고 합의문에 서명함.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와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惠) 사민당 당수, 가메이 시즈카(亀井靜香) 국민신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 3당 간사장 협상에서 합의한 정책 협상 내용을 추인하고 합의문에 공식 서명함. 민주당을 비롯한 3당은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미국과의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 ‘일·미 지위협정 개정 제기’, ‘미군 재편과 주일미군 기지 문제 개선’ 등을 명문화함. 하지만 사민당이 요구한 오키나와 기지의 해외이전은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음.
- 3당은 중국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뢰관계와 협력 체제를 확립해 동아시아공동체로 나아간다는 데도 합의함.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적 협력체제를 통해 북한에 의한 핵·미사일 개발을 막고, 납치문제의 해결에 전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음. 아프가니스탄 문제와 관련해서는 “테러의 온상을 제거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의 실태를 파악해 지원책을 검토하고 빈곤의 근절, 국가의 재건에 주체적 역할을 하기로 함.”
-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제조업의 비정규직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대비해 ‘직접고용 간주제도’를 만들고 해당기업의 마진정보를 공개하기로 함. 향후 4년간 소비세도 올리지 않기로 함. 내각에는 3당의 당수급 정책 협의기구로 민주당의 국가전략 담당상과 입각 예정인 사민당·국민신당 대표가 참여하는 ‘기본정책 각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함.



- 3당은 전날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간사장과 사민당의 시게노 야스마사(重野安正) 간사장, 국민신당의 가메이 대표가 밤 늦게까지 절충을 벌여 대부분의 이견을 해소했으나 미국 관련 외교·안보문제에 막혀 막판 난항을 겪었음. 연립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차기 총리인 하토야마 민주당 대표는 이르면 금주중 내각 인선을 마무리짓고 본격적인 정권 인수작업에 착수함.

● 한·호주, 기후변화 분야 협력 강화키로(9/10)

- 한국과 호주는 9일 호주 캔버라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외교통상부가 10일 밝힘. 이용준 외교부 차관보와 브루스 고스퍼 호주 외교부 차관보는 이번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양국간 에너지·자원 협력 및 농축산물 수출입, 방산수출 문제 등 양국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함.
- 양국 차관보는 아울러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현황을 평가하고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역내 안보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눔.
- 이 차관보는 특히 주요20개국(G20)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에 호주가 조속히 참가를 결정할 것을 요청하고 한국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고 외교부는 전함.
-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의 호주 국빈 방문을 통해 마련된 양국 간 실질 협력의 토대를 바탕으로 3년 만에 열린 것”이라며 “양국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유익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함.

● “中-대만, 외교적 휴전 암묵적 합의”<마잉주>(9/10)

- 마잉주(馬英九) 대만총통은 중국과 상대방의 외교 동맹국을 침해하지 않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했다고 9일 밝힘. 총통실에 따르면 마 총통은 이날 아이티 외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 상대방의 외교 동맹국을 추구하지 않기로 하는 외교적 휴전에 암묵적으로 합의했다면서 이는 국제사회에서 상호존중과 평화적 공존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말함.
- 대만과 중국은 1949년 내전 이후 분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대만을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으며, 무력으로라도 영토를 되찾겠다는 정책 하에 외교 동맹국들에게 대만과의 공식적 유대관계 단절을 요구하고 있음.
- 대만이 현재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는 아이티를 포함, 23개국에 불과하며 대부분 소규모 개발도상국임.
- 한편, 대만이 9일 개각을 단행한 데 이어 조만간 중국과 금융 서비스 협약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대만 경제일보가 10일 보도함.



- 신문은 대만과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기로 하고 올해 안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한 바 있다며 새로 내각이 임명됨에 따라 언제라도 양해각서에 서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함. 신문은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 “그동안 진전이 있었다. 양해각서와 관련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슈는 많지 않다”고 전함.

● 외교부 “한·EU FTA 10월 가서명”(9/10)

-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가서명이 다음달 이뤄진다고 외교통상부가 10일 밝힘.
- 이해민 외교부 FTA 교섭대표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EU 양측은 협정문 가서명을 10월 중에 추진기로 합의했다”고 말함. 양측은 가서명 일자와 서명 당사자를 양측의 통상장관으로 할지, 수석대표로 할지 협의 중임.
- EU 측은 27개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협정문에 정식서명할 수 있음. 현재 EU 측은 정식서명을 위해 회원국 간에 의견을 조율 중임. 이 교섭대표는 “협정문 번역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국내 비준 절차 등을 고려하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발효 시기는 내년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함.

● 한·이탈리아 외교장관회담 14일 개최(9/10)

- 한국과 이탈리아는 14일 서울 종로구 도림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외교장관회담을 연다고 외교통상부가 10일 밝힘. 유명환 외교부 장관과 프란코 프라티니 이탈리아 외교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간 현안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한반도 정세와 한-유럽연합(EU) 관계 강화 방안 등 지역 정세와 세계금융위기, 기후변화 등 국제문제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임.
- 유 장관은 또 이탈리아가 그동안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점을 감안,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이탈리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할 계획임. 아울러 두 장관은 각각 올해 주요8개국(G8) 의장국(이탈리아)과 내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의장국(한국)의 외교수장으로서 세계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G8과 G20간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고 외교부는 전함. 프라티니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13~16일 국빈 방한하는 조르지오 나폴리타노 이탈리아 대통령을 수행해 한국을 방문함.

● 日 연립협상 외교·안보 놓고 막판 담판(9/9)

- 일본 민주당이 사민당, 국민신당과 벌이고 있는 연립협상이 대부분의 이견을 해소했으나 외교·안보문제에 막혀 막판 난항을 겪고 있음. 민주당을 비롯한 3당은 전날 협상에 이어 9일 최종 타결을 위한 이견조정을 계속함.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간사장과



사민당의 시게노 야스마사(重野安正) 간사장, 국민신당의 가메이 시즈카(亀井静香) 대표는 8일 밤 늦게까지 연립정권 출범을 위한 절충을 벌였음.

- 3당은 내각에 설치할 당수급 협의기구로 민주당의 국가전략담당상과 입각 예정인 사민당·국민신당 대표가 참여하는 ‘기본정책 각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함. 3당은 또 비핵 3원칙, 복지정책과 우정민영화 문제, 긴급 고용안정대책, 신종플루 대책 등 연립정부의 공동 정책에 대해서도 대부분 합의함. 민주당의 오카다 간사장은 “한 두건을 제외하고 대부분 견해의 일치를 봤다”고 말함.
- 하지만 사민당이 미군의 오키나와(沖縄) 후텐바비행장 오키나와내 이전반대, 일미 지위협정의 개정, 자위대의 소말리아·인도양 즉시 철수 등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에 제동이 걸림. 이에 대해 민주당은 ‘현지 주민의 정서를 고려해 오키나와 기지 문제를 비롯 일미 양국간 과제로 해결을 추진’ ‘아프간의 실태를 고려하면서 지원책을 검토’ 등으로 완화된 절충안을 내놨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민주당은 이달 하순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만큼 미국 측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을 연립 합의문에 담기 어렵다는 입장임.

● “日 신정부 재정파탄 심각” <美 경제학자>(9/8)

- 일본은 민주당 신정권 하에서 재정이 “파탄을 맞을 수 있다”고 미국 경제학자가 7일 경고함. 하이프리퀀시 이코노믹스의 국제경제 전문가인 카를 와인버그 이코노미스트는 이메일 응답에서 민주당의 지출 계획과 세수 감소를 감안할 때 “일본 재정이 와해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함.
- 그는 “일본의 재정 파탄이 현시대 세계 경제에 가해지는 가장 심각한 타격일 것”이라면서 “지금의 금융 위기를 능가하는 심각한 것이 될 것으로 본다”고 경고함. 또 다른 민간 애널리스트들도 하토야마 유키오 신정부가 아동 복지와 교육개선 및 실업자 구제 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봄.
- 민주당이 앞서 밝힌 바로는 내년 4월 1일 시작되는 사회계연도에만 선거 공약 실행을 위해 7조1천억엔이 필요함. 재정 소요는 2013년의 경우 16조8천억엔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돼있음. 일본은 현회계연도에 기록적인 44조1천억엔의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 추세로 가면 2011년 4월 시작되는 2011회계연도에는 50조엔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일본의 공공부채 비율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200%에 근접해있음.
- 이와 관련해 물러나는 요사노 가오루 일본 재무상은 민주당 신정부가 재정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25% 혹은 그 이상의 소비세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하토야마는 향후 4년 기존의 5%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국채 2년물과 10년물간의 스프레드(수익률 차이)는 일본이 1.12%포인트로 2.15%포인트인 독일 및 2.51%포인트인 미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채권시장 관계자들은 채권 스프레드가 낮은 것은 투자자들이 그만큼 일본 경제의 장래를 어둡게 본다는 의미라면서 디플레이와 저조한 성장 때문에 스프레드가 계속 낮게 유지될 것으로 내다봄.

● 日 외환보유액 1조400억弗..사상최대(9/7)

- 일본 재무성은 8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이 1조423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7일 발표함. 이는 7월에 비해 197억 달러 증가한 것임. 일본의 외환보유액은 해외채권, 예금 등의 형태로 9천957억 달러, 금 235억 달러, 기타 외화자산 168억 달러 등으로 구성돼 있음.

● “한·중·일 정상회담 10월 중국 개최”(9/8)

- 한·중·일 3개국 정상회담이 오는 10월 초순 중국에서 개최된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8일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이 신문은 한중일 3국이 정상회담을 10월 8일 중국 텐진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전함. 일본의 차기 수상인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선거공약인 아시아 중시를 대내외에 과시할 예정임.
- 중국 측은 직전 한중일 정상회담이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의 고향인 후쿠오카(福岡)에서 개최된 전례를 들어 원자바오 총리의 고향인 텐진으로 개최지를 조정하고 있음. 당초 한중일 정상회담은 8월 하순으로 추진됐으나 일본의 8.30 총선 일정 때문에 미뤄짐.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이날 일본 외무성 소식통을 인용해 당초 8월로 예정됐던 3개국 정상회담이 일본의 총선 때문에 연기된 만큼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가 총리에 취임하면 3개국 정상회담이 연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함.
- 하토야마 대표는 외교에서 아시아 중시를 강조하고 있고, 중국도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원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함. 앞서 요미우리신문도 민주당 소식통을 인용해 하토야마 대표가 10월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지난 7일 보도한 바 있음.

● 베트남 내년 성장목표 6.5%(9/8)

- 베트남의 내년도 경제성장 목표가 6.5%로 책정됨. 현지 일간신문 탕니엔은 8일 베트남 중앙은행(SBV) 홈페이지를 인용해 베트남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1~1.5% 포인트 높아진 6.5%를 성장목표로 정했다고 보도함. SBV는 “올해보다 높은 성장률을 거둘 수 있게끔 모든 노력을 집중시키는 한편 오는 2011년의 빠른 성장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는 반드시 6.5%대의 성장을 이룩해야 한



다”고 강조함.

- SBV는 또 내년도 인플레이 억제 목표는 7% 이하로, 정부재정 지출 목표는 국내총생산(GDP)의 6.5%선에서 각각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응웬 수언 폭 장관은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세금 감면과 대출이자 보조금 같은 각종 조치를 취한 결과 지난 8개월 동안 산업과 농업 부문의 생산이 현저하게 증가되는 등 성과가 가시화하기 시작했다고 밝힘.
- 또 까오 비엩 싱 기획투자부(MPI) 차관도 내년의 GDP는 1천960조~1천970조동(1천80억달러)으로, 일인당 소득은 1천220달러에 각각 이를 것으로 내다봄. 또 농림수산물 생산은 3~3.4%, 공업 및 건설부문은 7~7.5%가 각각 성장할 것으로 예측함. 서비스 분야 역시 7.8~8.3%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싱 차관은 밝힘.
- 그는 이어 내년도 수출은 올해보다 6%, 총투자자본은 GDP의 40.7%를 각각 차지할 것으로 전망함. 싱 차관은 여러 경제지표들을 종합해 볼 때 내년에는 6.5~7%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일본 노무라연구소도 지난 7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베트남은 더 이상 위기 상황에 있지 않으며, 내년에는 GDP 기준으로 6.4%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내다봄.

● <외교가, ‘日 외상 내정자’에 촉각>(9/7)

- 일본 민주당 정권의 첫 외무상으로 낙점된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간사장에게 외교가의 시선이 쏠림. 이달 중순 총리로 취임하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가 총선 당시 간판공약으로 내건 ‘아시아 중시외교’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대외정책 ‘실현’을 진두지휘할 외교사령탑으로 내정됐다는 점에서임.
-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은 그가 대표적 ‘지한파’ 의원이라는 점임. 2000년대 초부터 1년에 서너 차례씩 한국을 드나들며 유력 정치인들과 지면을 꾸준히 넓혀온 것으로 외교가에 알려져있음. 그는 2001년 3월 한·일 차세대정치인 교류 차원에서 방한, 당시 민주당 정동영, 이인제, 김근태 의원, 한나라당 박근혜 부총재와 면담한 것을 계기로 ‘여의도 친구들’을 만들기 시작함.
- 당시 정동영 의원과 53년생 동갑내기로서 인연을 맺었던 오카다 간사장은 2007년 대선때 정 후보의 유세현장을 찾아 직접 격려하기도 했다는 후문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는 2004년 5월 민주당 대표로 등극한 지 한 달여 만에 방일을 제의하기도 함.
- 일·한의원연맹 또는 한·일포럼 회원으로서의 활동도 주목을 끌었음. 2004년 8월 일·한 의원연맹 행사를 통해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원, 민주당 이낙연, 그리고 현재 주일 대사인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 과도 교분을 쌓았고 2007년 5월에는 제15차 한·일포럼 행사를 계기로 학계, 언론계, 문화계 인사들을 두루 만남.
- 외교가가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오카다 간사장이 과거 반성에 주저



하는 자민당 내 지한파들과는 대조적으로 역사인식과 한·일관계에 매우 전향적이라는 점임. 한 소식통은 7일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일관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이는 향후 대외정책의 기조로서 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함.

- 오카다 간사장의 역사인식은 지난 7월 도쿄주재 한국특파원들과의 간담회 발언에서 잘 드러나고 있음. 그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 일본의 침략전쟁을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고 천명했고 미래 지향적으로 21세기 한·일관계를 유지해나가겠다고 선언함. 재일동포 등 영주외국인 참정권 문제는 조기실현 입장을 분명히 함.
- 앞서 2005년 4월에는 한국, 중국과의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며 고이즈미 정부의 외교정책을 정면 비판한데 이어 ‘미국 추종외교’를 비판하고 ‘아시아 중시외교’를 제안해 파장을 일으키기도 함. 그의 이 같은 친한(親韓)성향과 정책기조에 따라 외교가에서는 한·일관계가 의미있는 진전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음.
- 한 소식통은 “오카다 간사장이 외무상으로 확정될 경우 양국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함. 그러나 선거와 국정운영은 현실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대외정책기조에 급작스런 변화가 도출되기는 쉽지 않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음. 또 다른 소식통은 “당장 선부르게 기대감을 갖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함.
- 실제 오카다 간사장은 당장 현안인 북핵문제를 비롯한 대북 이슈에 대해서는 신중모드를 보이고 있음. 그는 북한과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북핵문제와 미사일문제, 납치문제가 선결되지 않고는 국교정상화가 어려우며 한·미와 공동보조를 맞춰나가겠다는 입장임.
-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영토 문제는 국가의 주장인 만큼 교과서 해설서에 명기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서로의 주장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다소 모호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음.



[참고 1] <北 '임금 300달러' 철회..개성공단 일지>(9/11, 연합뉴스)

-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과 관련, 예년 수준인 5% 인상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난 6월 개성공단 실무 회담에서 제기한 300달러(중전의 4배 수준)로의 인상 요구를 사실상 철회했다.
- 북한의 '12.1 조치'에 따른 경의선 육로통행 제한이 지난 1일 풀린데 이어 이번 임금 인상안까지 합의되면 북측의 일방적 결정으로 야기됐던 개성공단 업체들의 애로사항들이 대부분 해소되는 것이다.
- 남북간 개성공단 조성 합의부터 최근까지 개성공단 관련 진행 상황을 일지로 정리했다.

◇2000년

- ▲ 8.22 = 현대-北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총 6천612만㎡ 개발 합의서 체결

◇2002년

- ▲ 11.20 = 北, 개성공단지구법 제정
- ▲ 12. 8 = 남북 당국간 개성공단 통관, 검역, 통신합의서 체결
- ▲ 12.27 = 통일부, 현대·토공 협력사업자 승인

◇2003년

- ▲ 6.30 = 개성공단 1단계 건설 착공식
- ▲ 8.20 =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 등 4개 경협합의서 발효

◇2004년

- ▲ 1.29 = 남북 당국, 개성공단·금강산 출입 및 체류합의서 체결
- ▲ 4.13 = 현대·토공-북한 개성공단 330만㎡ 토지임차료, 지장물 보상비 등 계약 체결
- ▲ 4.23 = 통일부, 1단계 330만㎡ 협력사업 승인
- ▲ 5.18 = 토공, 시범단지 9만3천㎡ 분양 공고
- ▲ 6.14 = 시범단지 입주계약 체결(23개 기업 및 1개 기관)
- ▲ 10. 5 =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출범
- ▲ 10.20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개소
- ▲ 12.15 = 개성공단 첫 제품 생산

◇2005년

- ▲ 8. 1 = 토공, 본단지 1차 16만9천㎡ 분양 공고
- ▲ 11.22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북측 협력부 근무 시작
- ▲ 12. 5 = 본단지 1차 입주기업 공장건축 시작
- ▲ 12.28 = KT, 개성공단 통신공급 개시



◇2006년

- ▲ 5.22 = 북한측 통행검사소 신축건물 개소
- ▲ 5.31 = 1단계 330만㎡ 토지조성공사 완료
- ▲ 10.31 = 시범단지 23개 입주기업 완전 가동
- ▲ 11.21 = 북한근로자 1만명 고용 돌파
- ▲ 12.21 = 한전, 10만kW 남북 송전선 연결

◇2007년

- ▲ 1.30 = 총생산액 1억달러 달성
- ▲ 4.30 = 토공, 본단지 2차 175만㎡ 분양 공고
- ▲ 5.25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 9.30 = 공단입주기업 누적 생산액 2억달러 달성
- ▲ 10. 4 = 남북 정상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위한 선언’ 합의
- ▲ 10.16 = 개성공업지구 1단계사업 부지조성 준공식
- ▲ 11. 5 = 북한근로자 2만명 고용 돌파
- ▲ 12.11 = 남문산-北봉동 구간 경의선 열차 운행 시작
- ▲ 12.17 = 2단계 개발을 위한 측량·지질조사 착수
- ▲ 12.31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출범

◇2008년

- ▲ 3.24 = 北, 남측 당국 인원 전원철수 요구
- ▲ 3.27 =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 상주 남측 당국자 11명 전원 철수
- ▲ 6.22 = 남북군사회담 북측 대변인 담화, 남측의 ‘3통합의’ 불이행으로 개성공단 위기 조성 주장
- ▲ 6.24 = 北서해지구 군사실무 책임자, ‘공단→남측’ 인력·물자의 통행시간 제한 통보
- ▲ 7. 4 =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3만명 돌파
- ▲ 10. 2 = 남북군사실무회담 북측 대표단,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개성공단 사업 등에 부정적 영향’ 경고
- ▲ 11. 6 = 北국방위원회 정책실장인 김영철 중장 등 군부 조사단 6명, 개성공단 현지 실태 점검
- ▲ 11.12 =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대표 전통문 “12월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 통보
- ▲ 11.24 =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 12월1일자로 개성관광 전면차단과 개성공단·금강산관광지구의 남한 당국관련 기관·기업 상주 인원과 차량 선별 추방 입장 통보
- ▲ 11월중 = 공단 입주기업 누적 생산액 5억달러 돌파
- ▲ 12. 1 = 北, 개성공단 상주 체류 인원 880명으로 제한하고 남북통행 시간대와 통행허용 인원을 축소하는 등 내용의 ‘12.1 조치’ 시행



◇2009년

- ▲ 3.9~20 = 北,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 3차례 걸쳐 육로통행 차단
- ▲ 3.30 = 北, 개성공단 현대아산 유성진(44) 씨 ‘탈북책동·체제비난’ 등 혐의로 조사 개시
- ▲ 4.16 = 北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개성공단 운영 관련 중대문제’ 통지하겠다고 남측 당국자 초청
- ▲ 4.21 = 남북 당국자 개성서 접촉
- ▲ 5.15 = 北, 남측에 ‘개성공단 관련 법규·계약 무효’ 통보
- ▲ 6. 5 = 北, 11일 개성 남북경협협회사무소 접촉 제의..남북, 회담 개최 합의
- ▲ 6. 8 = 개성공단 의류업체 스킨넷 입주업체 중 처음으로 철수 결정
- ▲ 6.11 = 개성공단 실무회담..北 임금 300달러·토지사용료 5억달러 요구
- ▲ 6.16 = 이명박 대통령, 한미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관련 北 ‘무리한 요구’ 수용불가 천명
- ▲ 6.17 = 스킨넷, 입주기업 중 처음으로 철수
- ▲ 6.19 = 개성공단 제2차 실무회담..北, 개성공단 통행제한 풀 용의 있다고 밝힘.
- ▲ 6.25 = 개성공단기업협회 임원 등 30여명의 입주기업 대표, ‘개성공단 기업 살리기 대책회의’ 개최.
- ▲ 7. 2 = 개성공단 제3차 실무회담
- ▲ 8.13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방북으로 현대아산 유성진(44)씨 억류 136일 만에 풀려남.
- ▲ 8.17 = 현정은 회장, 7박8일간의 북한 방문을 마치고 귀환. 현 회장은 북측과 ‘개성관광 재개와 개성공업지구 사업 활성화’ 등 5개항의 교류사업에 합의.
- ▲ 8.20 = 北, ‘12.1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우리측에 통보.
- ▲ 9. 1 = ‘12.1 조치’ 해제에 따라 경의선 육로통행 정상화.
- ▲ 9.11 = 北, 내년 7월 말까지 적용될 금년도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인상과 관련, 예년 수준인 5% 인상안 제시.

ksw08@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9/11/0511000000AKR20090911116200043>.
HTML